

1 다음의 단점 혹은 한계로 인하여 정착이 어려운 예산제도는?

- 사업구조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
- 결정구조가 집권화되는 문제가 있다.
- 행정부처의 직원들이 복잡한 분석기법을 이해하기 어렵다.

- ① 품목별 예산제도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 ③ 계획예산제도 ④ 영기준 예산제도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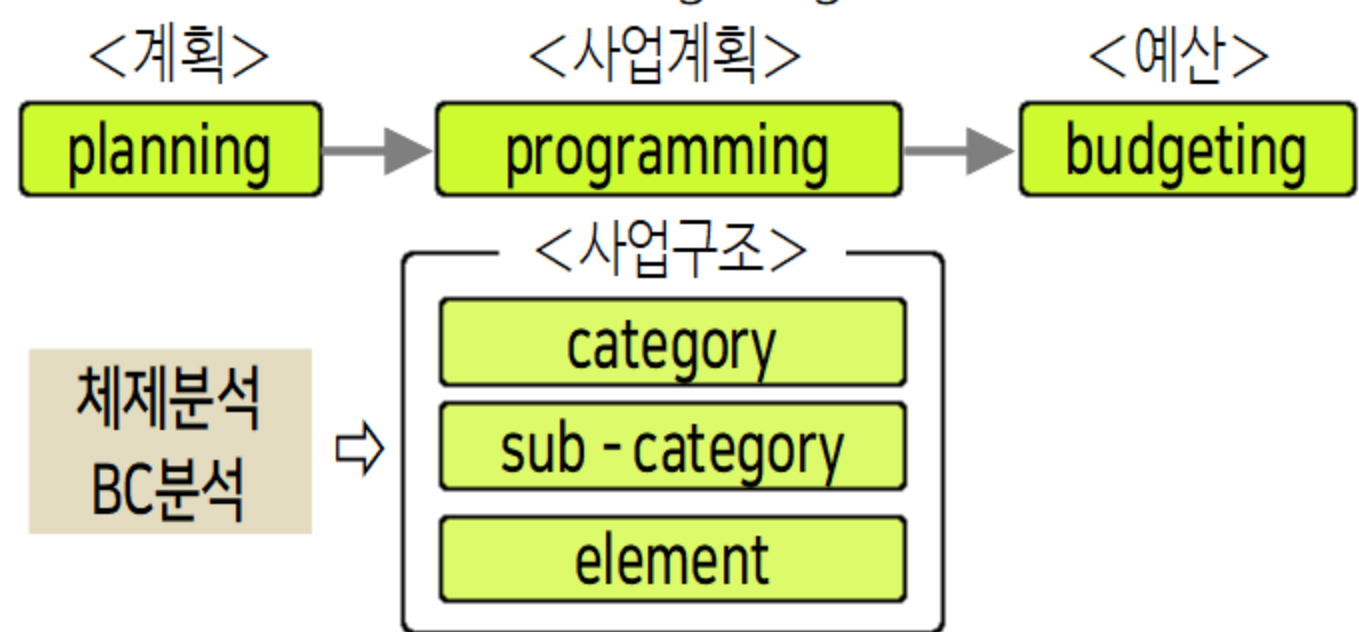
제시된 내용은 계획예산제도(PPBS)의 단점·한계이다.

✖ PPBS의 단점·한계

- ① 의사결정의 지나친 중앙집권화 : 전문 막로 중심의 운영과 지나친 집권화로 최고관리층의 권한을 강화(대통령에게 권한 집중, 부처 내에서는 국·과보다는 장관에게 권한 집중)시켜 하급공무원 및 계선기관의 참여 곤란
- ② 목표설정 및 사업구조(program structure) 작성 곤란 : 행정목표의 무형성·추상성, 현실적인 이해관계 및 의견 대립으로 목표의 정확한 제시가 곤란하고, 따라서 사업구조 작성에 있어서 사업의 포괄적·체계적 분류 곤란
- ③ 계량화의 곤란성 : 목표의 설정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계량화해야 하나, 실제 행정영역은 추상적 서비스의 제공이 많고 양적 계량화가 불가능한 정치적·윤리적·심리적 요인과 무형적 비용·편익이 존재함. 사업효과와 엄격한 예측·측정을 강조하지만 공공재의 효과는 대부분 계량적 측정이 곤란함. 특정 목표의 달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중복되는 경비나 간접비(공통경비)를 어떻게 배분할 지 판단 곤란.
- ④ 환산작업의 곤란 : 사업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단계와 집행하는 단계가 일치하지 않음. PPBS의 사업구조와 예산과목이 일치하지 않으며 예산서에 사업구조만 나타나고 집행기관(부서구분)은 명시되지 않으므로 예산의 편성·집행에 매우 복잡한 환산작업이 별도로 요구되며 환산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갈등이 발생함.
- ⑤ 정치과정과의 괴리(정치적 영향의 경시), 경험의 경시 :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므로 분석전문가의 힘이 강해지는 반면 경험 많은 관료나 정치적 타협·조정을 강조하는 정치가의 영향력은 약해짐.
- ⑥ 의회와 공무원의 이해 부족과 반발, 의회 지위의 약화 가능성 : PPBS의 복잡한 분석기법과 편성방법을 공무원이나 의회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 예산심의기능과 재정통제의 약화를 우려한 의회는 PPBS에 반대 입장이었고 정치적 합리성을 지향하는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함. 일선공무원들은 PPBS의 전반적인 프로그램구조의 강도가 함축한 조직개편의 위협을 두려워하여, 이 제도의 시행에 소극적이었음.
- ⑦ 과도한 문서와 정보량 : 분석과정에 많은 정보와 문서를 필요로 하므로 과도한 서류작업을 요구함.
- ⑧ 비용·효과의 비교 곤란 : 사업대안의 탐색과 정확한 효과분석을 통한 포괄적인 사업 간 비교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함. 비교가 가능하더라도 많은 인적·물적 자원과 시간·노력이 요구됨.
- ⑨ 제도적 경직성 : 장기계획에 의한 구속으로 환경변동이 심할 경우 사업의 축소·폐지 등 상황변화에 적응이 곤란 → 조직단위가 아닌 프로그램(사업) 단위만을 예산결정단위로 활용하므로 융통성·신축성 부족
- ⑩ 과도한 절약 : 값 싼 물자의 구입에 집착한 나머지 행정의 질 저하 우려.

✖ PPBS의 단계와 구조 : 계획(목표) - 사업 - 예산의 연계

목표를 설정하고(planning),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며(programming), 수립된 사업계획들에 자금을 체계적으로 배정(budgeting).



• 사업구조(program structure) : 목표를 구체화. 목표 - 수단관계를 체계화하는 나무(tree)모양 사업구조로 나타남.

- ① 사업범주(program category ; 대분류) : 조직기관의 주요목표와 임무를 나타냄, 프로그램구조의 최상위 분류. 최고관리층이 전략적으로 결정.
- ② 하위사업(program sub - category ; 중분류) : 사업범주를 다시 세분한 것으로, 사업기초요소를 묶은 항목
- ③ 사업요소(program element ; 단위사업) : 구체적인 재화나 용역을 가져올 수 있는 개별적인 업무. 더 이상 세분화될 수 없는 PPBS의 기본 단위(세부사업)로서 최종 산출물이어야 하고, 경계가 분명해야 함.

답 ③

[관련기출]

1. 계획예산제도(PP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의사결정의 집권화보다는 분권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② 목표설정은 가치판단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량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 ③ 국가목표를 실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탐색한다.
- ④ 국가목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 ⑤ 예산부서와 예산담당자의 분석적 능력이 요구된다.

2. 예산제도 중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2020 서울9급

기획(Planning), 사업구조화(Programming), 예산 (Budgeting)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제도로, 시간적으로 장기적 사업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뒷받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직목표달성 차원에서 성과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의 지나친 집권화와 실현가능성이 낮은 문제가 단점으로 지적된다.

- ① 성과예산제도 ② 계획예산제도 ③ 목표관리 예산제도 ④ 영기준 예산제도

3. 영기준 예산제도(Zero - Base Budgeting)의 단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008 국회8급

- ① 시간과 노력의 낭비
- ② 비교적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
- ③ 사업구조 작성의 곤란
- ④ 장기적인 목표의 경시
- ⑤ 소규모 조직의 희생

답 1. ① 2. ② 3. ③

2 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활용된다.
- ②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 ③ 법률상 지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
- ④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해 집행할 수 있다.

해설

- ② (×) 준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사전의결원칙의 예외)
- 헌법 제54조 3항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예 공무원 보수와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경비, 공공요금)
 -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예 행정상 손해배상액)
 -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답 ②

[관련기출]

1.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바른 것은?

2006 국회8급

- ① 헌법상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은 일반회계만을 의미한다.
- ③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면, 정부는 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 ④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되 집행범위의 제한은 없다.
- ⑤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준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회9급

- ①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② 헌법상 준예산으로 지출 가능한 경비를 제한하고 있다.
-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 ④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경비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 경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지출이 가능한 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준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소방간부

- ①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③ 국회의 사전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④ 우리나라는 정부수립과 함께 준예산제도를 계속 채택해오고 있다.
- ⑤ 예산 불성립에 따른 임시예산이다.

4. 준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경정승진

- ① 예산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② 준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는 공무원 보수, 명시이월비와 예비비,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이다.
- ③ 준예산은 예산 불성립시 대처방안으로 국회 사전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 ④ 제도의 도입 이후 중앙정부에서는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다.

5. 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때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행정사

- ① 우리나라는 1960년도 이후부터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② 우리나라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준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우리나라의 제1공화국 때는 가예산제도를 사용했다.
- ④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은 잠정예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 ⑤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도를 실제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

답 1. ⑤ 2. ④ 3. ④ 4. ② 5. ②

3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주광역시 북구이다.
- ④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논란이 있다.

해설

- ① (×) 지방재정법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예산의 범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② (○) 지방재정법 제39조 ①항
- ③ (○) •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 연혁**
 - ㉠ 2004.3.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가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 ㉡ 2006.1.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지방재정법에 규정하여 자율적 시행
 - ㉢ 2011.9. 주민참여예산제 의무적 시행으로 전환
 - ㉣ 2018.3.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에 대한 주민참여로 확대하여 예산편성과정 뿐 아니라 사업집행·평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④ (○) • **참여예산제도의 장점·한계**

장점	① 민주적 거버넌스의 강화, 주민참여로 재정의 부적절한 운영을 감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보완 ②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 관료 중심의 예산운영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기성·선심성 예산운영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 극복 ③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 시행으로 재정의 대응성 제고
한계	① 제도 시행·운영에 따른 행정비용 발생 ② 참여시민의 전문성과 대표성 부족, 예산편성의 합리성·전문성 부족 ③ 주민참여예산기구와 예산심의·의결권을 가진 지방의회와의 갈등(대의민주주의와의 충돌) ④ 지역이기주의 성격의 사업 반영, 주민의 요구에 따른 선심성 사업 추진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⑤ 자원배분이 지나치게 정치적 논리에 편향 ⑥ 기타 : 재정지출 규모와 구성비에 부정적 영향 우려, 공무원의 부정적 인식,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예산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경우 실효성 미흡

답 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법령 규정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시행할 수 있다 ×).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다(두어야 한다 ×) .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실시하여야 한다 ×).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근거 • 의무적 시행 •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가능(임의기구) • 의견수렴 및 의견서 예산안 첨부(필요적) • 행안부장관이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임의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반영해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실시해야 한다 ×) .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통령령 ×) 로 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방법 제시(조례로도 정할 수 있음) • 수렴된 주민 의견 반영(임의적) • 행안부장관의 제도운영 평가는 매년 실시 가능 • 범위·의견수렴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함

[관련기출]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 경찰승진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과정은 예산 편성, 심의 의결, 집행, 결산 등 전 과정을 포함한다.
- ③ 2011년 9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제도로 전환되었다.
-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수렴된 주민 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해야 한다.

해설

② (×) 협의의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단계의 참여에 초점을 두지만 광의로는 예산과정 모든 단계에서의 주민참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종전 '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로 개정하여 사업집행·평가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시키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집행, 결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심의의결과정은 제외된다.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답 ②

4 거래비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하는 데에는 시장이 계층제보다 효율적인 수단이다.
- ② 거래비용은 탐색비용, 거래의 이행 및 감시비용 등을 포함한다.
- ③ 시장의 자발적 교환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계층제의 조정비용보다 크면 내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④ 거래비용이론은 조직이 생겨나고 일정한 구조를 가지는 이유를 조직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접근방법이다.

해설

① (×)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하는 데에는 계층제가 시장보다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본다.

■ 조직(계층제)이 시장에 비해 효율적인 이유

- ㉠ 조직에서는 적응적·연속적 의사결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시킴.
- ㉡ 소수 교환관계에서 발생하는 기회주의 행태를 완화(희석)시킬 수 있음.
- ㉢ 구성원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 수렴됨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킴.
- ㉣ 정보의 밀집성(정보의 비대칭적 분포)이 쉽게 극복됨.
- ㉤ 불확실성과 기회주의 행태 문제를 계층적 권위나 제도적 관례, 규칙이나 규범, 장기적 관계 형성, 정책학습 등을 통해 해결 가능.

☞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s Costs Theory) - 윌리엄슨(O. Williamson)

1. 의미

① 대리인이론을 조직이론에 적용한 것으로, 조직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 조직 간 거래(소유자와 관리자, 관리자와 부하, 공급자와 생산자,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를 분석단위로 하여(미시적 분석) 생산보다는 비용에 관심을 가지고 **거래비용(의사결정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조직화의 원리를 찾음.**

• **조직경제학 또는 신제도론적 경제학**: 경제학을 조직이론에 도입한 이론으로서 내·외부의 경제적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직이 만들어지고 효율적인 조직구조가 형성된다는 이론으로 대리인이론과 거래비용이론이 이에 해당. 신제도론적 경제학은 합리적 선택에 의해 제도가 만들어진다는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론에 많은 분석적 틀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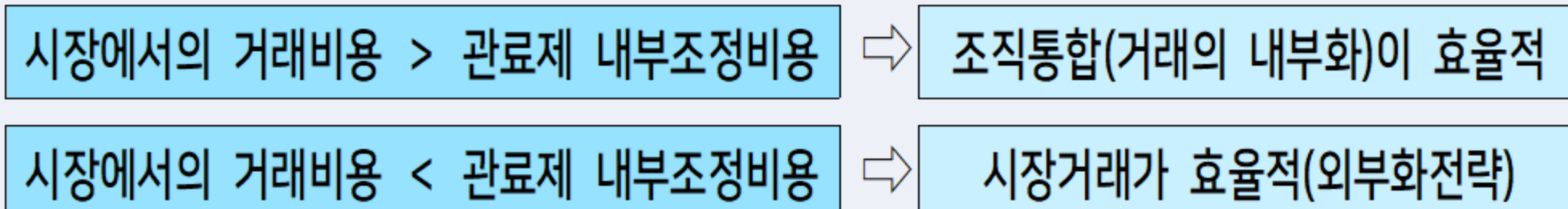
② 민간부분의 조직들이 생겨나고 일정한 구조를 가지는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설명. **조직은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지는 장치로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조직 내부의 관리비용보다 클 경우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시장 대신 계층제 기업조직이 생겨난다고 봄.**

2. 거래비용(Transactions Costs)

의미	정보비용·협상비용·통제비용·거래관계유지비용 등 경제적 교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유형	사전적 거래비용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 사항을 작성하고, 협상하며, 이행을 보장하는 비용 예) 거래준비를 위한 의사결정비용, 협상비용, 합의사항 작성비용, 정보이용비용 등	
	사후적 거래비용	거래가 계약 조건이나 이행과 협력에서 벗어나 발생하는 부적합의 조정비용. 사후 부대응(不對等) 관계를 시정하기 위해 양자가 노력할 경우 발생하는 협상비용. 예) 분쟁조정 관련비용, 확실한 계약 이행을 위한 보증비용, 감시비용, 이행비용	
발생 원인	인간적 요인	제한된 합리성	Simon이 제시한 제한된 합리성과 동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는 인간의 능력은 정보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합리적이다(bounded rationality).
		기회주의 행태	사전·사후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계산된 이기주의. 누가 속이고 속이지 않는지 모르는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그 구별에 거래비용이 소요됨.
	환경적 요인	자산의 전속성(특정성)(asset specificity)	자산의 전속성은 어떤 자산이 특정한 거래관계에 고착된 정도(자산 이전이 힘든 정도). 전속성이 클수록 거래비용 증가. ※ 높은 수준의 자산특정성은 양자 간의 독점을 의미하며 특정한 거래관계가 단절된다면 그 자산가치가 급격히 감소되므로 자산특정성이 높을수록 거래관계를 보호해주는 제도(예) 수직적 통합-계층제 구조)가 필요하다.
		불확실성	기회주의에서 파생된 효과로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계약은 보다 조건부의 형태를 띠며, 거래 이행에 따라 거래조건을 새롭게 찾아내고 협상·감독해야 하므로 거래비용은 증가.
	거래발생 빈도(소수자 교환관계)	① 일회성 거래(거래빈도 낮음) ⇨ 시장에서 다수의 거래당사자와 접촉 ⇨ 거래비용 적음 ⇨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유리 ② 반복성 거래(거래빈도 높음) ⇨ 지속적 계약에 의해 특정 소수자와의 교환에 국한 ⇨ 거래비용 많음 ⇨ 전문화된 지배구조(계층제)로 통합	

3. 효율적 기제의 판단

① 조직 통합-거래의 내부화, 내부화전략(시장거래를 조직 내 통제로 대체. 시장의 실패를 전제) : **거래비용의 최소화는 조직구조 효율성의 관건.** 조직통합은 시장보다 계층적 조직이 거래비용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로서 선택된 것. 내부조직화는 상호간 감독·감시 및 당사자 간 분쟁조정이 용이하고 정보격차를 악용하려는 유인과 기회주의적 행동의 가능성을 감소시킴. 시장을 통한 계약관계의 형성·집행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과 계층제적 조직이 될 경우의 내부관리비용(관료제적 조정비용)을 비교해 거래비용이 내부관리비용보다 많은 경우 수직적 통합, 즉 계층제적 조직이 형성됨(시장 및 위계이론).
※ 관료제적 조정비용 : 조직 내부적으로 합리성 제고, 기회주의 희석, 불확실성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



- ㉔ 시장거래에 의하는 경우-외부화 전략(조직 내부 활동(통제)을 시장거래로 대체. 조직의 실패를 전제) : 조직(계층제)이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보지는 않고 조직내부화가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조직내부화가 시장거래보다 비능률적일 때, 불확실성이 낮아 거래비용이 낮을 때, 내부관리 및 조정비용이 높을 경우에는 시장거래가 더 유리하다고 봄.
- ㉕ 정부운영상 시사점 :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개입 여부 판단이나 정부기능의 민영화·민간위탁(contracting-out)과 관련하여 거래비용이론이 응용됨.

답 ①

[관련기출]

1.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국회8급

- ① 상황이론은 유일한 최선의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 ② 조직군생태론은 횡단적 조직분석을 통하여 조직의 동형화(isomorphism)를 주로 연구한다.
- ③ 거래비용이론의 조직가설에 따르면, 정보의 비대칭성과 기회주의에 의한 거래비용의 증가 때문에 계층제가 필요하다.
- ④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주도적·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그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존재로 본다.
- ⑤ 전략적 선택이론은 조직구조의 변화가 외부 환경 변수보다는 조직 내 정책결정자의 상황판단과 전략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2. 거시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6 국가7급(인사·조직론)

- ① 거래비용이론은 거래비용이 높아지면 기업 내 위계조직 설립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한다.
- ②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사회생태학에 근거하여 유리한 환경을 형성하려는 조직의 적극적 노력에 초점을 둔다.
- ③ 구조적 상황이론은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조직 생존의 핵심요인으로 파악한다.
- ④ 전략적 선택이론, 자원의존이론, 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임의론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3.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9급(하)

- ① 자원의존이론에 따르면, 조직은 환경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환경에 피동적으로 순응하여야 한다.
- ② 주인-대리인이론에 따르면,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와 주인의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 ③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시장의 자발적인 교환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관료제의 조정비용보다 클 경우 거래를 내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④ 상황론적 조직이론에 따르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일·최선의 조직구조나 관리방법은 없다.

4. 윌리엄슨(O. Williamson)이 주장하는 거래비용이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경찰간부

- ① 거시조직이론의 분류상 결정론에 해당하므로, 조직의 행동은 환경에 대한 종속변수라고 본다.
- ② 거래비용의 외부화를 통한 비용의 최소화를 꾀하는 이론이다.
- ③ 내부조정비용이 거래비용보다 작을 때 조직통폐합이나 내부 조직화가 효과적이다.
- ④ 윌리엄슨(O. Williamson)은 거래비용이론에서 계층제가 시장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를 계층제가 적응적·연속적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여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완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본다.

답 1. ② 2. ④ 3. ① 4. ②

5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전략 및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경제적 손실 보상, 임용상 불이익 방지는 규범적·사회적 전략이다.
- ② 개혁지도자의 신망 개선, 의사전달과 참여의 원활화, 사명감 고취는 공리적·기술적 전략이다.
- ③ 교육훈련과 자기계발 기회 제공은 규범적·사회적 전략이다.
- ④ 개혁 시기 조정은 강제적 전략이다.

해설

① (×) 공리적·기술적 전략 / ② (×) 규범적·사회적 전략 / ④ (×) 공리적·기술적 전략.

☒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 극복 전략

규범적 사회적 협조적 전략	① 개혁의 규범적 당위성을 높이고 적절한 상징조작과 사회적·심리적 지원을 통한 자발적 협력과 수용을 유도. ㉠ 개혁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사전달 확대, 학습조직의 활용 ㉡ 개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혁의 당위성 및 예상되는 성과를 제시하여 설득 ㉢ 개혁안에 대한 집단토론 촉진. 집단사고 방지를 위해 생산적 비판이 제도화되는 의사전달 시스템 필요 ㉣ 태도·가치관의 변화를 위한 교육훈련, 자기계발 촉진시켜 개혁의 필요성을 깨닫게 함 ㉤ 조직 전체의 목표 추구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하고 개인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킴 ㉥ 개혁지도자의 신망·위신·카리스마 제고와 변혁적 리더십의 발휘로 개혁의 수용을 쉽게 함 ㉦ 개혁에 적응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며(개혁 수용에 필요한 시간 허용),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 해소의 기회 마련 ㉧ 기존의 가치와 새로운 가치의 양립가능성 강조하여 가치 갈등으로 인한 저항 극복 ② 효용 : 저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조직의 인간화를 강조하는 경우 가장 선호되는 방법 ③ 한계 :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됨.
공리적 (호혜적) 기술적 전략	① 관련자의 이익침해를 방지 또는 보상하고, 개혁과정의 기술적 요인들을 조정하여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 ㉠ 기득권을 덜 침해하거나 기술적인 것부터 실시, 개혁안의 점진적 추진 ㉡ 정치·사회적 환경이 유리한 시기를 선택 ㉢ 개혁안을 가능한 한 객관적·계량적으로 제시(개혁안 명확화), 공공성을 강조하는 기술 사용 ㉣ 개혁의 방법·기술을 융통성 있게 수행하고, 신축성 있는 적절한 인사배치(개혁에 적합한 인사 임용) ㉤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익과 손실을 교환하는 협상), 신분과 보수의 유지 약속 ㉥ 개혁의 가치와 개인 이득의 명확화 ② 효용 : 피해집단이 저항하는 경우, 기술적 측면에 대한 저항인 경우 유효 ③ 한계 : 많은 비용이 들고, 저항에 양보·굴복하는 결과를 초래. 장기적 효과 기대 곤란. 개혁의 의미 퇴색.

강제적 전략	① 최종적인 저항 극복방법으로 저항자에 대해 물리적 제재나 불이익의 위협을 가하는 방법. ㉠ 계층제 상 권한(상·하 서열관계) 사용, 의식적인 긴장 조성을 통해 개혁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조성 ㉡ 권력구조의 일방적 개혁으로 저항집단의 세력 약화 ㉢ 신분상 불이익처분 같은 압력을 가하여 저항을 억압 ② 효용 : 긴급한 상황에서 개혁추진자가 강한 권력을 보유한 경우 유효 ③ 한계 : 단기적 대증요법으로 저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함, 긴급을 요하고 개혁추진자가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나, 많은 부작용과 또 다른 저항을 유발할 수 있음.
--------	---

답 ③

[관련기출]	
1. 다음 내용에서 조직 개혁에 있어 저항을 극복하는 전략적인 '규범적·사회적 전략'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1 경찰간부
㉠ 개혁안의 명확화와 공공성 강조 ㉡ 개혁지도자의 카리스마 활용 ㉢ 집단 토론과 훈련의 확대 ㉣ 적절한 시기의 선택 ㉤ 긴장 분위기 조성 및 압력의 행사 ㉥ 인사이동 등 적절한 인사배치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행정개혁 저항에 대한 사회적·규범적 극복방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9 행정사
㉠ 교육훈련 ㉡ 임용상 불이익 방지 ㉢ 경제적 보상 ㉣ 긴장조성 ㉤ 의사소통과 참여 촉진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3. 행정개혁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규범적·사회적 전략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22 행정사
㉠ 의사전달과 참여의 확대 ㉡ 개혁의 공공성에 대한 홍보 ㉢ 사명감 고취와 역할 인식 강화 ㉣ 권력구조 개편과 긴장 조성 ㉤ 신분보장과 경제적 보상 ㉥ 가치갈등 해소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답 1. ④ 2. ② 3. ②

6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배분하여야 한다. ㉡ 서로 관련된 사무들을 배분할 때는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보다는 시·도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시·군 및 자치구가 해당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 주민의 편익증진과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

해설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배분 원칙에 해당

- ㉠ **현지성(現地性) 원칙(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 지방주민의 복리 및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무는 주민참여와 주민의 효과적인 통제 하에서 스스로 처리되도록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여 현지실정에 맞게 민주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는 원칙
- ㉡ **포괄성 원칙** :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자기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
- ㉢ **보충성(subsidiarity) 원칙** : 사무분배시 기초자치단체가 우선 담당하게 하되, 자체적인 처리 곤란시 광역자치단체, 국가 순으로 담당한다는 원칙.
- ㉤ **보충성 원칙 중 적극적 의미의 보충성과 관련된.**

소극적 의미의 보충성	기초정부(기초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상급공동체)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정부 간 사무배분시 지역주민으로부터 지리·공간적으로 가까운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 상위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되며, 업무처리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적인 사회구성단위의 활동을 파괴·박탈하면 안 된다.
적극적 의미의 보충성	상급정부(상급공동체)는 기초정부(기초공동체)가 어떤 업무 수행능력이 없다하여 곧바로 기초정부의 관할권을 배제하고 자신의 업무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기초정부가 1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하위의 정부가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는 사무에 대해 상위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 즉 상급정부는 필요한 최저수준을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개인 및 지역의 삶을 보장하여 개인 및 지역 간 과도한 격차를 줄여야 한다.

㉤ **권한·책임 명확화 원칙(불경합성 원칙, 경합피지[競合防止] 원칙, 중복배분금지 원칙)**

- **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 ① 국가는 제9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 사무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이양받은 권한 및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기구·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예산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답 ④

[관련기출]

1.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지방7급

- ① 비경합성의 원칙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행정수요의 충족이 불가능할 경우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순으로 행정수요의 충족 책임이 옮겨가는 것을 뜻한다.
- ②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경제성의 원칙 또는 효율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 ③ 보충성의 원칙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다투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재정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④ 포괄성의 원칙은 동종의 업무나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는 같이 배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상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18 지방7급

- 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3. 사무배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 서울7급(지방자치론)

- ① 보충성의 원칙 - 중층의 국가공동체 조직의 하급단위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② 효율성의 원칙 - 사무배분에 있어 동종의 업무나 상호 밀접히 연관된 업무는 같이 배분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
- ③ 현지성의 원칙 - 지역사회에 가깝고 주민의 통제가 용이한 정부에 사무를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
- ④ 충분재정의 원칙 - 지방정부가 그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이나 재정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4. 다음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배분과 관련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2 서울7급

- ① 지방정부의 전문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회문제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원칙
- ②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원을 보충해주어야 한다는 원칙
- ③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기능을 사전에 배분하지 않고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민주적인 토론을 통하여 기존 정부의 기능을 보충하자는 원칙
- ④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기능을 지방정부의 기능으로 보완하자는 원칙
- ⑤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지방정부의 기능을 규정한 후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기능에 한하여 중앙정부의 기능으로 보완하자는 원칙

5. 지방분권의 추진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다음 내용에서 모두 고르면?

2018 국회9급

- ㉠ 단편적인 지방이양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사무를 이양해야 한다는 원칙
- ㉡ 우선적으로 분권조치를 취하고 자치단체가 분권의 부작용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갖도록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
-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행정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연계성 부족 문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
- ㉤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6.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무배분의 원칙은?

2011 서울7급(지방자치론)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무배분에 있어 동종의 업무를 여러 계층의 정부가 관여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 결과 처리과정이 복잡해지고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마저 불명확했다. 이 원칙은 바로 이러한 관행을 시정하는 데 그 뜻을 두고 있다.

- ① 현지성의 원칙 ② 보충성의 원칙 ③ 포괄성의 원칙 ④ 효율성의 원칙 ⑤ 경제성의 원칙

7. 지방분권 추진 원칙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2020 지방9급

- 기능 배분에 있어 가까운 정부에게 우선적 관할권을 부여한다.
- 민간이 처리할 수 있다면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 가까운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 ① 보충성의 원칙 ② 포괄성의 원칙 ③ 형평성의 원칙 ④ 경제성의 원칙

답 1. ④ 2. ③ 3. ② 4. ⑤ 5. ⑤ 6. ③ 7. ①

7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면 제재력이 약화되는 역기능이 있다.
- ② 타인에 대한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 ③ 호혜주의는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사회적 자본은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순기능이 있다.

해설

- ① (×) **사회자본은 규범 또는 효과적인 사회적 제재력으로 작용** : 집단행동의 논리에 의해 사회적 규범이 강화되면,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효과가 있음. 정부 개입 없이도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사회적 제재력을 지님. 범죄나 일탈행위를 예방하여 공식적인 감독과 통제의 필요성을 감소시킴(사회자본은 비공식적 사회적 통제력을 지닌 것으로 공식적·법적 제재와는 구별됨).
- ②③ (×) **사회적 자본의 기본 구성요소** : 협동적 Network(연계관계), 호혜적 규범 사회적 신뢰(믿음)로 구성(R. Putnam).
 - ㉠ **사회적 네트워크** :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협력적 네트워크.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들 사이에 수평적으로 조직화된 네트워크는 그 연대가 강할수록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 그러나 후원자-고객관계 등 수직적으로 조직화된 네트워크는 그 연대가 강할수록 사회적 자본에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호혜적 규범** : 시민들 사이에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균형화된 호혜관계, 일반화된 호혜관계.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주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하는 일방적 관계나, 가족·동창 등 특수 집단 내에서만 도움을 주고받고 다른 집단은 차별하는 특수화된 호혜관계는 공동체 전체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부정적일 수 있음.
 - ㉢ **사회적 신뢰** : 공동체 구성원 사이, 정부와 시민 사이에 형성된 신뢰.
- ④ (○) **신뢰를 통한 거래비용 감소** :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관계가 이루어지므로 계약을 위한 협상 등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경제적 활동의 효율성을 높인다.
 - **정부의 거래비용과 기관손실** : 정부조직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을 때 이를 감시하기 위한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관손실(agency loss)」 현상이 나타난다. 기존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특별한 사정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 등은 경제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거래비용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답 ④

[관련기출]

1. 다음 중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3 국회8급

- ① 사회적 자본은 사회 내 신뢰강화를 통해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 ②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에 비해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
- ③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규범 또는 효과적인 사회적 제재력을 제공한다.
- ④ 사회적 자본은 동조성(conformity)을 요구하면서 개인의 행동이나 사적 선택을 적극적으로 촉진시킨다.
- ⑤ 사회적 자본은 집단결속력으로 인해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2.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다음 내용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19 서울7급(1)

- ㉠ 퍼트남(R. Putnam)은 사회적 자본에 있어 네트워크, 규범, 신뢰를 강조하였다.
- ㉡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경우 거래비용 감소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 ㉢ 사회적 자본은 조정과 협동을 용이하게 만든다.
- ㉣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 개발사업에 사회적 자본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 ㉤ 후쿠야마(F. Fukuyama)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신은 사회적 비효율성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

3.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 해경승진 / 2018 서울7급

- ①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을 의미한다.
- ②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 조정과 협력을 촉진한다.
- ③ 사회적 관계에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준다.
- ④ 공동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봉사를 전제로 한다.

4.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7 서울7급

- ① 신뢰를 통해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다.
- ② 단기간에 정부 주도하의 국민운동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 ③ 개념적으로 추상적이기에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쉽지 않다.
- ④ 개인, 집단, 지역공동체, 국가 등 상이한 수준에서 정의될 수 있다.

5.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012 서울7급

- ① 사회적 자본이 큰 나라일수록 갈등이 적다.
- ②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협력을 기초로 한다.
- ③ 정부신뢰가 증가할수록 공무원과 민간의 협력이 증가한다.
- ④ 사회적 자본은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 ⑤ 사회적 자본은 형성과정이 불투명하므로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6. 다음 중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 경정승진

- ① 사회적 자본은 사회 내 신뢰 강화를 통해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며 인적자본과는 대조적으로 구성원들이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 ②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에 비해 형성과정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며 형성과정은 상향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 ③ 사회적 자본은 동조성(conformity)을 요구하면서 개인의 행동이나 사적 선택을 적극적으로 촉진시키고 집단 결속력으로 인해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 ④ 사회적 자본의 영향은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나타나며,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7. 사회자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13 서울9급
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이다. ② 한 행위자만이 배타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협력적 행태를 촉진시키지만 혁신적 조직의 발전을 저해한다. ④ 행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⑤ 사회적 관계에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준다.	
8.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소방간부
① 사회적 자본은 신뢰, 공동체의식, 유대감, 호혜성 등을 구성요소로 한다. ② 사회적 자본의 특징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으로 설명된다. ③ 사회적 자본은 상이한 차원에서 정의할 수 있는 다의적인 개념이다. ④ 사회적 자본은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효과적인 사회적 제재력을 갖는다. ⑤ 사회적 자본은 사적재로서의 특성을 갖지 않는 공공재이다.	
9. 사회자본의 특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군무원
① 사회자본의 사회적 교환관계는 동등한 가치의 등가교환 관계이다. ② 사회자본은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게 하므로 계약을 위한 협상 등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③ 사회자본은 지속적인 교환과정을 거쳐서 유지되고 재생산된다. ④ 사회자본은 국가 간 이동성과 대체성이 낮고 단기간에 형성되기 어려우나 한번 형성되면 그 사회적 영향은 장기간 지속된다.	
10. 다음의 사회적 자본이론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5 경찰간부
① 사회학적 시각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출현에 필요한 조건으로서 연결이나 관계를 강조한다. ② 사회적 자본의 순기능으로는 신뢰를 통해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들 수 있다. ③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제재 메커니즘을 제공하며, 상호간 소망스러운 행위를 유도한다. ④ 지역사회와 집단에의 참여는 반드시 동조성(conformity)에 대한 요구를 창출하고, 이로 인해 개인의 사적 자유는 더 보장받게 된다.	

답 1. ④ 2. ④ 3. ④ 4. ② 5. ⑤ 6. ③ 7. ③ 8. ⑤ 9. ① 10. ④

8 일반적인 조직구조 설계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계선은 부하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참모는 정보제공, 자료분석, 기획 등의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 부문화의 원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기능이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조직단위로 묶는 것을 의미한다.
 ㉢ 통솔범위가 넓을수록 고도의 수직적 분화가 일어나 고층구조가 형성되고, 좁을수록 평면구조가 이뤄진다.
 ㉣ 명령통일의 원리는 부하가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게 해야 함을 의미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 (x) 통솔범위와 계층수는 역의 관계에 있다. 통솔범위가 좁을수록 고도의 수직적 분화가 일어나 고층구조가 형성되고, 넓을수록 평면구조가 이뤄진다.

답 ②

[관련기출]

1.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국가7급(상)
① 복잡성은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의 분화 정도를 말한다. ② 고객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 요구는 집권화를 촉진한다. ③ 통솔범위가 넓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고층구조를 갖는다. ④ 공식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구성원들의 재량이 증가한다.	
2.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 지방9급
① 공식화(formalization)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구성원들의 재량이 증가한다. ② 통솔범위(span of control)가 넓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저층구조의 형태를 보인다. ③ 집권화(centralization)의 수준이 높은 조직의 의사결정권한은 조직의 상층부에 집중된다. ④ 명령체계(chain of command)는 조직 내 구성원을 연결하는 연속된 권한의 흐름으로, 누가 누구에게 보고하는지를 결정한다.	

답 1. ① 2. ①

9 홉스테드(G. Hofstede)의 문화 차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확실성 회피 정도가 강한 경우 공식적 규정을 많이 만들어 불확실한 요소를 최대한 통제하려 한다.
 ② 집단주의가 강한 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개인 간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
 ③ 권력거리가 큰 경우 제도나 조직 내에 내재되어 있는 상당한 권력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인정한다.
 ④ 남성성이 강한 문화는 여성성이 강한 문화보다 상대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인정하려고 한다.

해설

- ② (×)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는 개인적 성취와 개인의 자유·권리를 강조하므로 개인 간 관계의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집단주의가 강한 문화는 집단의 목표와 구성원간 관계를 중시하며, 집단이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높다.

답 ②

※ 호프스테드(G. Hofstede)의 문화차원이론(Cultural Dimensions Theory)

호프스테드는 IBM 근무 당시 70여 개국 약 10만명의 IBM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각 국가별로 일반화할 수 있는 문화적 차이를 6가지로 제시.

권력 거리 [권력격차] (power distance)	조직이나 단체(가족과 같은)에서 권력이 작은 구성원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수용하고 기대하는 정도. ① 낮은 권력 거리[권력격차] - 평등주의: 권력관계가 상호의존적 민주적임. 사람 사이 관계는 형식적 위치에 관계 없이 평등하고, 하급자가 권력자의 의사결정에 기여하거나 비판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음. ② 높은 권력 거리[권력격차] - 권위주의·계서주의: 권력이 작은 측이 전제적 거부장적 권력 관계를 그대로 수용. 구성원 간 권력배분의 차이가 크며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경향이 강함
개인주의 / 집단주의 (individualism / collectivism)	개인이 집단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행동하는가의 정도. ① 개인주의: 개인적 성취와 개인의 자유·권리를 강조하므로 개인간 구속력이 느슨함. 자신과 직계 가족을 스스로 책임질 것을 요구받고 자신의 소속을 스스로 결정. 개인적 양심에서 나오는 죄책감(guilt)을 통해 사람들을 통제. ② 집단주의: 특정 집단에 소속·통합되어 소속집단에 충성하는 대가로 보호를 받는 사회. 집단의 목표와 구성원간 관계 중시. 사회전체, 소속집단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관심이 높음. 집단이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도나 관행 상 자원배분이나 보상을 개인이 아닌 집단을 기준으로 함. 집단적인 의무감에서 나오는 수치감(shame, 불명예)을 통해 사람들을 통제.
불확실성 회피 (uncertainty avoidance)	불확실성과 애매성에 대한 사회적 저항력.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불안에 대처하려는 정도. ① 불확실성 회피(안정지향, 보수성): 보다 감정적인 경향, 알 수 없거나 이례적인 환경의 발생을 최소화, 사회 변화에 있어 계획과 규범, 법과 규제를 이용한 신중하고 점진적인 태도. ② 불확실성 감수(변화 지향, 개방성): 비체계적 상황이나 가변적 환경을 편안히 받아들이고, 규칙은 되도록 적게 만들. 보다 실용적이며, 변화에 관용적임.
남성성 / 여성성 (masculinity / femininity)	성별 간 감정적 역할의 분화. ① 남성적 문화: 경쟁력, 자기주장, 유물론, 야망, 권력 등 중시. 성취를 이룩하는 사람이 존경 받음. 성역할의 차이가 크고 유동성이 작음. 의사결정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경향. ② 여성적 문화: 대인관계나 삶의 질을 보다 높게 평가. 표면적 성공이 큰 존경을 받지 못함. 정숙이나 헌신 같은 개념을 남녀 양성 모두 똑같이 강조 받음.
장기/단기 지향성 (long/short term orientation)	사회의 시간범위를 설명. ① 장기 지향적 사회: 미래에 더 많은 중요성 부여. 지속성, 절약, 적응능력 등 보상을 지향하는 실용적 가치를 조성 - 실용주의 ② 단기 지향적 사회: 끈기, 전통에 대한 존중, 호혜성, 사회적 책임 준수 등 과거와 현재에 관련된 가치 중시.
쾌락추구 / 절제 (indulgence / restraint)	사회구성원의 자신의 욕구와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 ① 쾌락 추구: 대체로 낙관적이고 삶을 즐기려는 경향. 여가생활과 휴가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 ② 절제: 비관적·냉소적 경향, 여가생활·취미활동 욕구가 낮고, 이런 활동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기도 함

※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권력격차가 크며(권위주의),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가 강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정도가 높으며(안정주의), 여성성이 강하고(온정주의), 장기지향성이 강하며, 절제 경향이 높다. 우리나라는 표면적으로는 경쟁적이고, 성취위주 사회로 보이지만 여성성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봐주기, 정상참작, 법과 규정에 대한 융통적인 자세와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인사들이 국민의 진전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관련기출]

1. 호프스테드(G. Hofstede)의 문화차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 국가7급(인사·조직)

- ①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장기-단기 성향, 보편주의-특수주의, 남성성-여성성, 성취-귀속을 포함하고 있다.
- ② 장기성향이 강한 사회는 전통보다 현재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현실적응적이며 변화지향적인 성격이 강하다.
- ③ 권력거리(power distance)란 조직이나 단체에서 권력이 작은 구성원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④ 불확실성 회피정도가 큰 문화에서는 공식적인 규칙을 되도록 적게 만들려고 한다.

2. 행정문화란 행정체제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신념, 그리고 태도와 행동양식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호프스테드(G. Hofstede)의 문화 차원을 근거로 하였을 때 한국문화의 특성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015 국가7급

- ① 개인주의 ② 온정주의 ③ 권위주의 ④ 안정주의

해설

1. ① (×) 보편주의-특수주의, 성취-귀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6가지 문화차원: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위험선호-회피), 장기-단기 성향, 쾌락추구-절제, 남성성-여성성, 개인주의-집단주의, 쾌락추구와 절제
- ② (×) 장기성향이 강한 사회는 전통(과거)·현재와 관련된 가치보다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더 중시한다.
 • 장기 지향적 사회: 미래에 더 많은 중요성 부여. 지속성, 절약, 적응능력 등 보상을 지향하는 실용적 가치를 조성 - 실용주의
 • 단기 지향적 사회: 끈기, 전통에 대한 존중, 호혜성, 사회적 책임 준수 등 과거와 현재에 관련된 가치 중시.
- ③ (○) 권력거리(power distance)란 사회적 권력 및 권위가 구성원들 간에 다르게 행사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수용도 및 어떠한 방식으로 권력이 행사되는 것을 선호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권력거리는 조직이나 단체에서 권력이 작은 구성원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④ (×) 불확실성 회피 정도가 큰 문화에서는 모호한 상황에 대한 초조와 불안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위험을 줄이고 안정을 꾀한다.
2.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권력격차가 크며(권위주의),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가 강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정도가 높으며(안정주의), 여성성이 강하고(온정주의), 장기지향성이 강하며, 절제 경향이 높다.

답 1. ③ 2. ①

10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합적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리더와 부하의 관계, 부하의 성숙도, 과업구조의 조합에 따라 리더의 상황적 유리성(situational favorableness)을 설명한다.
- ② 리더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인 경우 과업 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 ③ LPC(Least Preferred Coworker) 점수를 사용하여 리더를 과업 지향적 리더와 관계 지향적 리더로 분류했다.
- ④ 리더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

해설

① (x) 상황적 유리성 결정변수는 리더와 부하의 관계, **직위권력**, 과업구조

☒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적합적 리더십이론(1967)

- ① 리더의 유형 : 리더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동료(LPC ; Least Preferred Co-worker)에 대한 리더의 평정점수에 의해 분류.
 - ㉠ LPC 점수 높음(싫어하는 동료를 그 사람과의 관계나 정을 고려해 호의적으로 평가) ⇨ **관계지향**(relationship-motivated) 리더
 - ㉡ LPC 점수 낮음(싫어하는 동료를 비호의적으로 평가) ⇨ **과업지향**(task-motivated) 리더
 - ② 리더십 상황적 유리성 결정변수 : 리더십의 효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
 - ㉠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leader-member relations) : 리더와 부하의 관계-상호 신뢰감
 - ㉡ 과업구조(task structure) : 리더가 담당하는 과업의 구조화 정도(과업의 목표·달성방법·성과기준의 명확·구체성)
 - ㉢ 직위권력(position power) : 직무수행을 위해 리더의 직위에 조직이 공식적으로 부여한 권력
 - ③ 상황에 따른 적합한 리더십
 - ㉠ 상황이 유리한 경우나 불리한 경우 ⇨ LPC 점수가 낮은 **과업지향 리더가 효과적임.**
 - ㉡ 상황유리성이 중간 수준인 경우(⇨ LPC 점수가 높은 **관계지향 리더가 효과적임.**
- ☒ Fiedler는 리더십의 유형을 상황의 유리성에 따라 관계지향리더와 과업지향리더로 구분하였다.(x) ⇨ 리더 유형 구분기준은 LPC 점수

답 ①

[관련기출]

1. 피들러(F. Fiedler)의 상황적응리더십 이론에서 주장하는 3가지 상황변수가 아닌 것은? 2007 부산 소방직

- ① 지도자와 부하의 관계 ② 지도자의 자질 ③ 업무의 조직화 ④ 지도자의 권위

2.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 국가7급(인사·조직)

- ① 리더십 이론은 시기적으로 상황론, 행태론, 자질론 등의 순서로 전개되었다.
- ② 오하이오주립대의 리더십 연구는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토대로 관리망(managerial grid)이론을 구성하였다.
- ③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 구성요소는 조건적 보상과 예외관리로 요약할 수 있으며, 거래적 리더십에 비해 구성원의 단기적 성과에 관심을 가진다.
- ④ 리더십 효과가 리더와 구성원 관계, 과업구조, 그리고 리더의 직위에서 나오는 권력(position power)에 의존한다는 상황론은 피들러(Fiedler)가 개발한 모형이다.

3. 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2017 국가7급(하)

- ㉠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합이론(contingency theory of leadership)에서는 상황변수로 '리더와 부하의 관계', '직위 권력', '과업구조' 세 가지를 들고 있다.
- ㉡ 허시와 블랜차드(Hersey & Blanchard)의 경로-목표이론(path-goal theory of leadership)에서는 상황변수로 부하의 능력과 의욕으로 구성되는 성숙도를 채택하였다.
- ㉢ 하우스(House)는 리더십을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과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으로 구분하였다.
- ㉣ 블레이크와 머튼(Blake & Mouton)의 관리격자(managerial grid) 모형에 따르면 무기력형, 컨트리클럽형, 과업형, 중도형, 팀형이라는 기본적인 리더십 유형이 도출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4. 다음 중 리더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005 경북9급(1)

- ① Fiedler는 상황의 유리성을 기준으로 리더의 유형을 과업중심형과 인간중심형으로 구분하였다.
- ② Ohio주립대학 연구에서는 구조설정(initiating centered)과 배려(consideration)라는 두 가지 국면을 기준으로 네 가지 리더십유형을 구분하였다.
- ③ House는 경로목표이론을 통하여 효과적인 리더십이나 동기유발은 리더의 특성(자질)보다는 상황과 리더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 ④ 변혁적 리더십은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할거적 구조보다는 단순구조, 임시조직에 더 적합하다.

5. 휘들러(Fiedler)의 상황적응적 리더십유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2005 경기9급(2)

- ① 리더십의 효과성 여부는 특정 상황이 리더에게 유리한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 ② 상황이 매우 유리할 때에는 인간관계중심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 ③ 상황의 유리성이 중간정도일 때에는 인간관계중심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 ④ 상황이 매우 불리할 때에는 과업중심적 리더십이 매우 효과적이다.

6.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 서울9급

- ① 피들러(Fiedler)는 상황 요소로 리더의 자질, 과업 구조, 부하의 특성을 들었다.
- ② 블레이크(Blake)와 머튼(Mouton)의 리더십 격자 모형은 리더의 행태를 사람과 과업(생산)의 두 차원으로 나눈다.
- ③ 허쉬(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리더십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요소로 부하의 성숙도를 들었다.
- ④ 아이오와(Iowa) 주립대학의 리더십 연구에서는 리더의 행태를 민주형, 권위형, 방임형으로 분류하였다.

답 1. ② 2. ④ 3. ② 4. ① 5. ③ 6. ①

11 **엽관주의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 민주화에 기여
- ② 정치지도자의 행정 통솔력 강화
- ③ 정당정치 발달에 공헌
- ④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해설

④ (×) 정권교체시 대량의 인력 경질로 인해 행정의 안정성·계속성·일관성 확보는 곤란

☒ 엽관주의의 장·단점

장점	① 관직을 만인에게 개방하여 특정 계층의 공직 독점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의 평등이념에 부합(단, 정당의 당원을 공직에 임용하므로 기회균등은 아님). 많은 사람들이 정부 일에 참여하면서 공무원 체제의 민주성과 사회적 대표성이 높아지는 등 관료기구와 국민의 동질성 확보. ② 정당의 대중화와 정당정치의 발달에 공헌, 정당이념의 철저한 실현과 공약의 강력한 추진 가능. ③ 공직경질을 통한 관료특권화나 관료침체 방지. ④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당원이 공직에 임명되므로 국민의사를 존중하는 민주통제 강화, 책임행정의 구현. ⑤ 행정의 민주성·대응성 향상(엽관제에 의해 임명된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에 비해 국민의 요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 ⑥ 동일한 정치이념을 지닌 자들로 공직이 구성되어 정책의 강력한 추진과 실현이 용이하므로 정책수행 과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고 정치적 변혁이나 중요한 정책변동에 유리. ⑦ 공무원의 적극적 충성심을 확보하고, 공무원을 더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어 최고관리층의 리더십을 강화시킴.
단점·폐해	① 비전문가의 임용으로 인한 공직의 질 저하와 행정의 비능률성(비효율성)·비전문성 초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점 ⑥번 「정책수행 과정」의 효율성 제고와는 구별할 것 ② 정권교체시 대량의 인력 경질로 인해 행정의 안정성·계속성·일관성 저해. ③ 공직취임·신분유지가 소속 정당이나 집권자에 대한 충성에 의존하므로 관료의 정당 사병화, 특정 정당을 위한 봉사로 인해 행정의 공정성·공익성·중립성·대표성·책임성 보장 곤란. ④ 소수에 의한 정당의 과두적 지배를 촉진하여 공직의 사유화·상품화 경향 초래. 위인설관(爲人設官) 등 불필요한 관직남설로 인한 예산낭비, 매관매직(賣官賣職)에 의한 정치적·행정적 부정부패 초래. ⑤ 정당원만이 공무원에 임용되므로 기회균등원리에 위배. ⑥ 신분보장 미흡으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 저하, 직업공무원제 정착 곤란.

답 ④

[관련기출]

1. 다음 중 엽관주의와 관련이 없는 것은?

2006 국회8급

- ① 정당에 대한 충성 및 공헌도에 의한 임용
- ② 개인의 능력과 자격 중심의 인사
- ③ 행정의 계속성, 안정성, 지속성 위협
- ④ 대통령의 정책구현 용이
- ⑤ 행정의 능률성 저하

2. 공무원인사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2009 지방9급

- ㉠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제도의 취지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 조화될 수 없어서 양 제도의 혼합 운용이 어렵다.
- ㉡ 엽관주의는 공무원의 충성심을 확보하기는 용이하나,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 ㉢ 직업공무원제도는 일반적으로 폐쇄형 임용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연대감을 높여준다.
- ㉣ 직업공무원제도는 대체로 실적주의를 전제로 하며, 전문가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 ㉤ 대표관료제는 정부정책 집행의 효율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높여준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3. 엽관주의 인사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2012 군무원9급

- ①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확보
- ② 행정의 공정성 확보
- ③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 향상
- ④ 유능한 인재 등용

4.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 지방9급

- ① 엽관주의는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 임용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이다.
- ②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는다.
- ③ 행정국가 현상의 등장은 실적주의 수립의 환경적 기반을 제공했다.
- ④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 공무원제, 일반행정가주의를 지향한다.

5. 엽관주의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다음 내용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18 서울7급(2)

- ㉠ 부정부패를 방지하기가 쉽다.
- ㉡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쉽다.
- ㉢ 정부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 ㉣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 ㉤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도움이 된다.
- ㉥ 공무원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6. 엽관주의의 인사 단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5 서울9급

- ①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한다.
- ③ 행정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 ④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

7. 엽관주의의 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5 군무원

- ① 대통령 등 집권정치인들이 공무원을 통솔하기 곤란하다.
- ② 정권교체시 대량경질로 행정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 ③ 행정의 민주적 책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 ④ 정당정치 발달에 도움이 된다.

8. 다음 중 엽관주의와 관련이 없는 것은?	2006 국회8급
① 정당에 대한 충성 및 공헌도에 의한 임용 ② 개인의 능력과 자격 중심의 인사 ③ 행정의 계속성, 안정성, 지속성 위협 ④ 대통령의 정책구현 용이 ⑤ 행정의 능률성 저하	
9. 다음 중 엽관주의의 폐단과 관련하여 타당성이 적은 것은?	2004 서울9급
① 민주주의의 이념 저해 ② 행정의 안정성 저해 ③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저해 ④ 행정의 낭비 초래 ⑤ 행정의 능률성 저하	
10. 엽관주의의 장점 또는 정당화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은?	2004 행정고시
① 행정의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② 행정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③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④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⑤ 행정의 계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답 1. ② 2. ③ 3. ③ 4. ② 5. ① 6. ④ 7. ① 8. ② 9. ① 10. ②

12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제도이다.
- ②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보람있는 직업으로 선택하여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인사제도이다.
- ③ 공무원이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집단화 할 염려가 있다.
- ④ 공무원의 일체감과 단결심 및 공직에 헌신하려는 정신을 강화하는 데 불리한 제도이다.

해설

④ (×) 불리한 ⇨ 유리한

■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

장점	①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장기근무를 유도하므로 행정의 안정성·계속성·독립성 확보 ② 행정의 중립성·독립성·공익성 :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여 의회정치나 정당정치의 폐단을 방지 ③ 내각책임제의 성공요건 : 정권교체로 인한 행정의 공백상태를 방지,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 유지 가능 ④ 신분보장과 승진기회 부여를 통한 사기양양 과 경력중심의 승진제도 운영으로 인사행정의 객관성 확보 ⑤ 전문직업의식 강화 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 확보 ⑥ 공직에서의 이직률 저하, 공직에 대한 충성심 제고 ⑦ 공무원은 정부에서만 필요한 인적자원으로 육성되므로, 정부와 공무원 간 온정적·의존적 관계가 강화됨 .
단점	① 관료침체와 민주통제 곤란 : 지나친 신분보장으로 인한 공무원집단의 특권집단화, 관료주의화와 민주통제 곤란과 책임성 약화 ②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부족 : 무사안일주의, 공직사회의 침체, 보수성, 현상유지성향, 개혁·변동에 대한 저항 ③ 행정의 전문성 저해, 전문행정가 양성 곤란 : 폐쇄형 임용으로 인해 외부의 유능한 전문인력 충원 곤란, 계급제라는 공직분류체계상 전문행정가의 육성 곤란(직업공무원 신규채용시 유능한 인재를 임용하지만 임용 후 승진임용은 폐쇄형에 의하므로 외부의 유능한 전문인력의 충원이 곤란). ※ 직업공무원제는 전문직업주의(professionalism)를 추구하지만, 전문행정주의(specialism)를 저해한다. ④ 공직임용에의 기회균등 저해 : 학력·연령의 엄격한 제한으로 공직임용에의 기회균등을 제약하여 민주주의 평등원칙에 위배 ⑤ 직업전환 곤란 : 정부의 공직에서만 필요한 직업인으로 굳어짐 ⑥ 승진지망의 과열 : 승진지망의 과열현상과 승진적체의 문제 야기

답 ④

[관련기출]

1.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018 해경승진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폐쇄형 임용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②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일체감과 봉사정신이 낮아진다. ③ 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우선 공직임용에서 연령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④ 실적주의가 확립되지 않아도 직업공무원제는 확립될 수 있다.	
2. 인사제도의 유형과 그에 대한 비판이 옳지 않은 것은?	2013 전환특채
① 실적주의 - 인사운용이 소극적이다. ② 대표관료제 - 인사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③ 엽관주의 - 관직의 남설로 인해 재정적 낭비를 초래한다. ④ 직업공무원제 - 공무원의 일체감과 봉사정신이 낮아진다.	
3.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회9급
① 행정의 지속성, 안정성,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② 정부 관료제에 대한 정당 및 정치지도자의 지도력과 통솔력을 강화한다. ③ 공직을 하나의 전문 직업분야로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④ 공무원집단의 폐쇄성과 관료주의화를 초래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의 신분보장으로 인한 무사안일을 초래할 수 있다.	

4.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지방9급

- ①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이다.
- ② 폐쇄적 임용을 통해 공무원집단의 보수화를 예방하고 전문행정가 양성을 촉진한다.
- ③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행동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④ 조직 내에 승진적체가 심화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

5.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사회복지9급

- ① 공무원집단이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 집단화될 우려가 있다.
- ② 직업공무원제가 성공적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한다.
- ③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및 일관성 유지에 유리하다.
- ④ 직업공무원제는 일반적으로 전문행정가 양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 요구에 부응한다.

답 1. ① 2. ④ 3. ② 4. ② 5. ④

13 살라몬(Salamon)의 정책수단 유형 중 직접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사회적 규제 ② 보조금 ③ 조세지출 ④ 공기업

해설

■ 행정수단의 분류 - 직접성(directness) 기준 ... 살라몬(L. M. Salamon)

• 직접성 : 공공활동을 허가하거나 재원을 조달하거나 개시한 주체가 그것을 수행하는데 관여하는 정도.

직접성	정책수단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관리가능성	합법성, 정당성(정치적 지지)
높음	공적 보험, 직접대출, 정보제공, 공기업, 경제적 규제, 정부소비(직접시행)	높음	중간	높음	높음	낮음
중간	조세지출, 계약, 사회적 규제, 벌금	낮음/중간	중간	낮음	낮음	높음
낮음	손해책임법[불법행위 책임], 보조금, 대출보증, 정부출자기업, 바우처	낮음	높음	낮음	낮음	높음

- ① 직접성이 높은 수단 : 정부가 직접 개입하므로 정책효과가 크고(효과성 높음), 소외계층에 대한 차등적 지원이 가능하며(형평성 높음),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가 용이함(관리가능성 높음). 반면 시장보다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곤란하고(효율성 중간), 직접 개입에 따른 법령상 근거를 일일이 갖추고 지켜야 하는 것이 곤란하며(합법성 낮음), 정부의 직접 개입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정치적 지지 낮음).
- ② 직접성이 낮은 수단 : 시장질서에 의존하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고(효율성 높음) 법령의 근거를 따로 갖출 필요가 없으며(합법성·정당성 높음)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므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음(정치적 지지 높음). 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으므로 정책효과가 작고(효과성 낮음),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곤란하며(형평성 낮음), 직접 개입하지 않으므로 관리가 곤란(관리가능성 낮음).

■ 살라몬은 뉴거버넌스의 대두에 따라 증가하는 간접적 정부개입까지 포착하기 위해 정부조치의 수단(tools of government action)을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단으로 구분하면서는 공적보험을 간접적 수단으로 분류. 전통적으로 정부보험은 직접적 수단이었지만, 오늘날 미국에서 간접적 수단화 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임.

답 ④

[관련기출]

1. 살라몬(L. M. Salamon)의 정책수단분류에서 직접성의 정도가 낮은 유형에 속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2011 국가7급

- ㉠ 경제규제(economic regulation) ㉡ 보조금(grant) ㉢ 바우처(voucher) ㉣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s)

- ① ㉠, ㉢ ② ㉠, ㉡ ③ ㉡, ㉢ ④ ㉡, ㉣

2. 살라몬(Salamon)의 '직접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정책) 수단분류'에 의할 때 다음 중 직접성이 가장 높은 행정(정책) 수단은?

2015 서울9급

- ① 조세지출 ② 정부출자기업 ③ 사회적 규제 ④ 정부 소비

3. 살라몬(L. M. Salamon)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유형에서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은 것은?

2018 국가9급

- ㉠ 조세지출(tax expenditure) ㉡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 정부소비(direct government)
- ㉣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 보조금(grant)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답 1. ③ 2. ④ 3. ③

14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정책평가 대상 확정 ㉡ 평가 결과 제시 ㉢ 인과모형 설정
- ㉣ 자료 수집 및 분석 ㉤ 정책목표 확인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해설

☒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절차(목-대-기-인-설-자-환)

① 정책목표 확인	원래 의도한 목표를 명확히 하고 측정 가능하도록 규정함.
② 평가 대상 및 평가기준 확정 (평가성 사정 포함)	평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식별·확정. 정책의 성격에 따라 정책을 평가할 가치기준(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등) 설정. 이 단계에서 평가성 사정(예비 평가로서 평가의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 검토)이 이루어짐.
③ 인과모형 설정	정책효과에 관한 인과과계를 추론할 수 있는 인과모형 작성. 정책을 독립변수로, 정책결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정책이 정책결과의 원인변수로 적절하게 설정된 것인지 확인, 정책이 정책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도출.
④ 연구설계[평가설계] (evaluation design)	인과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설계. 평가기법은 양적 기법과 질적 기법이 있음. 양적 기법으로는 진실함 설계가 바람직하나 준실험, 비실험 설계도 사용.
⑤ 자료 수집	면접, 설문조사, 관찰,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이용해 필요한 자료 수집
⑥ 자료 분석·해석	수집된 자료를 분산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분석·해석
⑦ 평가결과의 환류 및 활용	평가를 통해 얻은 정보가 정책결정·집행·평가과정에 환류되어 정책결정의 품질 제고와 정책내용 개선, 정책집행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활용됨.

답 ③

[관련기출]

1. 일반적인 정책평가의 절차를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2017 사회복지9급

㉠ 인과모형의 설정	㉡ 자료 수집 및 분석	㉢ 정책목표의 확인
㉣ 정책평가 대상 및 기준의 확정	㉤ 평가 결과의 환류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2. 정책평가의 절차 중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2017 행정사

- ①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② 인과모형의 설정 ③ 대상 및 기준의 설정 ④ 평가결과의 환류 ⑤ 정책목표의 확인

답 1. ③ 2.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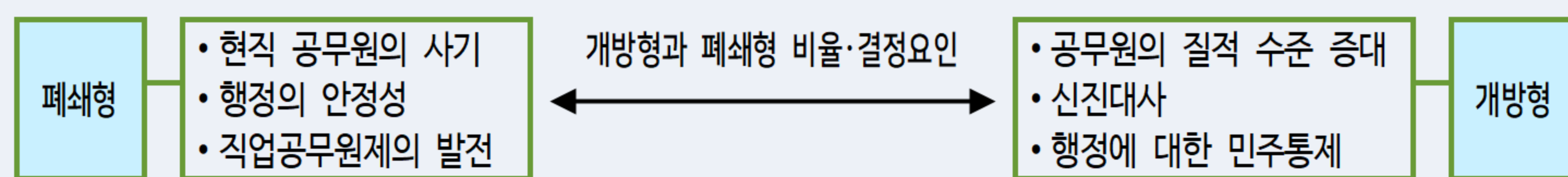
15 개방형 또는 폐쇄형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방형 인사제도는 외부전문가나 경력자에게 공직을 개방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 아이디어를 수용해 공직사회의 침체를 막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② 일반적으로 폐쇄형 인사제도는 직위분류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일반행정가보다 전문가 중심의 인력구조를 선호한다.
 ③ 개방형 인사제도는 폐쇄형 인사제도에 비해 안정적인 공직사회를 형성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장기근무를 장려한다.
 ④ 폐쇄형 인사제도는 개방형 인사제도에 비해 내부승진과 경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적다.

해설

- ② (×) 개방형 인사제도 : 직위분류제에 바탕을 두며, 전문행정가 선호.
 폐쇄형 인사제도 : 계급제·직업공무원제에 바탕을 두며, 일반행정가 선호.
 ③ (×) 폐쇄형 인사제도는 신분보장이 강하므로 안정적인 공직사회를 형성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장기근무를 장려한다.
 ④ (×) 폐쇄형 인사제도는 개방형 인사제도에 비해 내부승진과 경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많다.

☒ 개방형과 폐쇄형



구 분	개방형	폐쇄형
개 념	하위직뿐 아니라 중·상위직까지 외부충원을 허용하여 전문관리자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식 → 공직의 모든 계급이나 직위를 불구하고 신규임용 허용함.	하위직만 외부충원을 허용하여 승진제도를 통해 관리자를 내부에서 양성하는 방식 → 계층구조의 중간에 외부로부터의 신규임용 허용하지 않음.
배 경	산업사회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발전	농업사회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발전
관련 인사제도	실적주의, 직위분류제와 관련	계급제, 직업공무원제와 관련
채택국가	미국, 캐나다, 필리핀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신분보장	신분불안정(임용권자가 좌우)	신분보장(법적 보장)
신규임용	전 등급에서 허용	최하위직만 허용
승진한계	승진한계 낮음	승진한계 높음(높은 직위까지 승진 가능)
승진기준	최적격자(외부임용, 공개모집)	상위적격자(내부임용, 연공서열)
임용자격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능력 강조, 전문행정가(specialist)	일반소양과 자질 강조, 일반행정가(generalist)
공직분류기준	직무 중심	사람 중심(능력, 자격, 학력 등)
직원 간 관계	사무적	온정적

답 ①

[관련기출]

1.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지방7급(1회)

- ①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사이의 생산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자기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② 단기적으로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반하는 제도이나 장기적으로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③ 민간전문가가 공직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을 지휘해야 할 직위에 임용되었을 경우에 조직 장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④ 공직사회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특정 직무에 필요한 우수인력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

2. 다음 중 개방형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군무원

- ① 외부로부터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직접 영입할 수 있어 신진대사를 촉진할 수 있다.
- ②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 ③ 공직의 유동성을 높여 관료주의화 및 공직사회의 침체를 방지할 수 있다.
- ④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어렵다.

답 1. ② 2. ④

16 다양성 관리(diversity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오늘날 개인의 성격, 가치관의 차이와 같은 내면적 다양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② 다양성 관리란 내적·외적 차이를 가진 다양한 조직구성원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적자원관리 과정이다.
- ③ 균형인사정책, 일과 삶 균형정책은 다양성 관리의 방안으로 볼 수 없다.
- ④ 대표관료제를 통한 조직 내 다양성 증대는 실적주의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해설

☒ 다양성관리(Diversity Management)

- ㉠ **개념** : 사회 및 조직 속에 존재하는 '다름'을 포용하기 위한 관리적 활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인사관리 및 조직관리에서 논의되는 다양성 관리의 인적자원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조직 구성원들이 지닌 이질성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고 이러한 이질성을 존중하는 관리 활동.
- ㉡ **조직 구성원 간에 존재하는 이질성**
 - ㉢ 성별, 인종, 장애 유무 등 표면적 차원(Surface Level)의 외적 다양성(External Diversity)
 - ㉣ 성격, 선호, 가치관, 문화적 배경 등 심층적 차원(Deep Level)의 내적 다양성(Internal Diversity)
- ㉢ **다양성 관리의 대상 범위**
 - ㉣ 초기의 다양성 관리의 여성차별·흑인차별 철폐 등 표면적 차원의 외적 다양성을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나 사회의 풍요로움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개개인의 행복 수준 같은 심리적 지표를 강조하면서 다양성의 개념이 외적 다양성에서 내적 다양성으로 확장되고 다양성 관리의 영역도 확대됨.
 - ㉣ 현재의 다양성 관리의 외적 다양성을 중심으로 선발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활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내적 다양성을 중심으로 선발 과정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유지·활용, 평가·보상 등 인사관리 전 과정에서 다름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활동으로 확대.

구분	소극적 다양성 관리(Passive Diversity Management)	적극적 다양성 관리(Active Diversity Management)
대상	외적 다양성 관리	외적 다양성 관리(차별 철폐) + 내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포용
목표	채용과정에서 사회적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 철폐로 사회적 형평성 구현	조직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정책	<p style="text-align: center;">균형인사정책</p> 예) 양성채용목표제, 장애인의무고용, 저소득층채용할당, 지역인재채용 등	<p style="text-align: center;">일과 삶 균형 정책</p> 예) 유연근무제, 육아휴직제, 선택적 복지제도, 시간선택제근무제 등

• 균형인사정책(Balanced Personnel Policy)

여성, 장애인, 지방·지역인재, 이공계 등 그간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소수집단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고, 인사관리상의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인사정책. 인사혁신처의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은 양성평등 실현, 장애인·지역인재·이공계·사회통합형 인재에 대한 채용-인사관리-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균형인사 정책 과제를 담고 있음.

•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 워라밸)정책

일과 삶의 균형이란 '일'과 '일' 이외의 영역(가족, 여가, 개인의 성장 및 자기개발) 등에 시간과 심리적·신체적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삶을 스스로 통제·조절할 수 있으며 삶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는 상태. 이를 추구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배려와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하는 총체적인 행위가 일과 삶의 균형정책. 개인 간의 욕구의 위계는 모두 상이한데, 인적 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그들의 상이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WLB의 고려가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되고 있음. 관련 정책 사례로는 유연근무제, 육아휴직제, 선택적 복지제도, 시간선택제근무 등이 있음.

답 ③

17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직구성원의 응집성이 아주 강한 혼란상태에 있는 조직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기술하고 설명한다.
- ② 불명확한 기술(unclear technology)은 조직에서 의사결정 참여자의 범위와 그들이 투입하는 에너지가 유동적임을 의미한다.
- ③ 쓰레기통 모형의 의사결정 방식에는 끼워넣기(by oversight)와 미뤄두기(by flight)가 포함된다.
- ④ 문제성 있는 선호(problematic preferences)는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해설

- ① (×) 응집성이 아주 강한 혼란상태 → 응집성이 약한 혼란상태(조직화된 혼란상태)
- ② (×) 임시적(간헐적) 참여자(part-time participants)에 대한 내용임.
- ③ (○) 쓰레기통모형에서의 의사결정방식은 문제해결이나 준해결보다는 시간이나 여유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비정상적 의사결정인 진빠기(choice by flight : 탈피, 미뤄두기)나 날치기(choice by oversight : 간과, 끼어두기) 방식의 의사결정이 주로 이뤄짐.
- ④ (×) 불명확한 기술(unclear technology)에 대한 내용임.

답 ③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 마치, 코헨, 올슨(J. March, M. Cohen, J. Olsen)	
의의	① 마치(J. March), 코헨(M. Cohen), 올슨(J. Olsen)이 컴퓨터 Simulation 기법에 의하여 이론화시킨 의사결정모형. ②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단위나 구성원 사이에 응집성이 약한 혼란된 상태, 즉 조직화된 무질서상태(organized anarchy) 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특징적 측면을 강조하는 집단적 의사결정모형 . * 쓰레기통모형의 적용 상황 : 느슨한 형태로 구조화되어 운영되고 계층제적 권위가 없으며 상하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대학조직이나 연구소에 잘 적용되며 다당제인 의회 내 결정이나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모두에 관련된 결정 또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결정에도 적용될 수 있음. ③ 합리모형처럼 체계적인 정책 선택이 아니라, 쓰레기통 속 쓰레기처럼 뒤죽박죽되다 우연히 결정된다는 극도로 불합리한 집단적 의사결정상황을 설명. 합리성을 극도로 제약하는 세 가지 전제조건 하에서 의사결정의 네 요소가 우연히 결합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설명.
세 가지 전제 조건	• 세 가지 전제조건 : 조직화된 무질서(무정부·혼란)(organized anarchy) 상태의 속성 ① 문제성 있는, 불확실한 선호(problematic preference, ambiguity of preference) : 의사결정에 참여자들 간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합의가 없거나, 참여자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인식조차 없이 의사결정에 참여(해결할 문제 또는 목표 불분명). 의사결정자는 선호에 의해 행동하기보다는 행동을 통해 선호를 배우거나, 행동 뒤에 선호가 나타남. ② 불명확한 기술(unclear technology) :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수단을 선택할지 모름. 문제해결의 수단은 시행착오에 의하여 습득되거나 과거의 부분적인 경험에 의존하는 등 기술이 명확하지 않음. ③ 임시적·간헐적·수시적 참여자(part-time participants) : 의사결정 참여자의 범위와 그들이 투입하는 에너지가 유동적임. 문제에 따라 참여자가 달라질 수 있고, 특정인이 특정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유동적으로 참여(fluid participation), 조직화된 무질서의 주요 원인임.
의사 결정의 네가지 요소	•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 : 상호관련성 없이 독자적 개별적으로 흐름. ① 문제(problem)의 흐름 : 문제는 대안이나 해결책과 무관하게 흘러 다님. ② 해결책(solution)의 흐름 : 사회문제가 심각해지면 해결책을 마련하지만 의사결정기회가 올 때까지 혼자 흘러 다님. ③ 의사결정기회(choice opportunity)의 흐름 : 의사결정 기회(예 회의)가 와도 사회문제가 정책의제화 되지 않았거나 해결책으로서 정책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음. ④ 참여자(participants)의 흐름 : 참여할 정책결정자들은 수시로 참여하며 문제에 대해 모르거나 결정의 순간까지 해결책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의사 결정의 계기	① 조직화된 무질서상태에서는 쓰레기통 안에 온갖 쓰레기들이 다른 시각에 여러 과정을 거쳐 우연히 한곳에 모여지듯이 네 가지 요소가 어떤 극적인 점화계기(trigger event)에 의해 우연히 합쳐져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② 점화계기 ㉠ 문제를 부각시키는 극적 사건 (예 입시에 시달리던 중학생이 자살 → 고교 입시의 개편) ㉡ 정치적 사건 - 정권변동으로 국가적 분위기, 정치이념의 변화(예 정치적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6공화국이 들어서자 노동문제 논의 확산)
의사 결정의 방식	합리모형은 문제해결이 의사결정을 통해 이뤄지고 회사모형은 하위집단의 연합에 의한 갈등의 준해결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뤄지지만, 쓰레기통모형에서는 문제 해결·준해결 보다는 시간·여유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비합리적 의사결정방식인 진빠기나 날치기 방식의 결정이 주로 이뤄짐. ① 인적·물적 자원의 여유가 없을 경우 ㉠ 진빠기 결정(choice by flight ; 탈피) : 관련된 문제의 주장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 하다가 힘이 빠져 다른 의사결정 기회를 찾아 스스로 떠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의사결정. ㉡ 날치기 통과(choice by oversight ; 간과) : 관련된 다른 문제들이 제기되기 전에 재빨리 의사결정. ② 인적·물적 자원의 여유가 있는 경우 : 문제 해결 또는 준해결(quasi-resolution).
한계	① 대부분의 조직은 조직화된 혼란상태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의사결정도 합리적·체계적으로 이뤄짐. 조직화된 무정부상태는 일부 조직이나 조직 내부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특수한 경우임. ② 비일상적 의사결정만 다루어 분업, 표준화된 결정 등 일상적 의사결정을 설명하지 못함. ③ 정책결정 상황을 우연으로만 설명하므로 결정자의 의지성을 설명하지 못함.

[관련기출]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1 국회9급

- 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합의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 ② 쓰레기통모형에서 의사결정은 혼란 속에서도 매우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 ③ M. Cohen, J. March, J. Olsen은 이 모형에 대한 연구에서 응집성이 강한 조직의 의사결정 행태를 분석하였다.
- ④ 쓰레기통모형의 정책결정 유형으로 진빠기 결정(choice by flight)과 날치기 통과(choice by oversight) 등을 들 수 있다.
- ⑤ 의사결정은 5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해결해야 할 문제, 해결책, 참여자, 필요한 정보, 의사결정의 기회이다.

답 ④

18 정책 델파이(policy delphi)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립되는 입장에 내재된 가정과 논증을 표면화시키고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② 개인의 판단을 집약할 때, 불일치와 갈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수치를 사용한다.
- ③ 정책대안에 대한 주장들이 표면화된 후에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비공개적으로 토론을 벌이게 한다.
- ④ 참가자를 선발하는 과정은 '전문성' 자체보다는 이해관계와 식견이라는 기준에 바탕을 둔다.

해설

③ (×) 정책대안에 대한 주장들이 표면화된 후에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토론을 벌이게 한다.

✕ 정책델파이(policy delphi)

의의	• 전통적 델파이의 한계를 건설적으로 극복하여 정책문제의 복잡성에 맞는 정책대안의 탐색·개발과 결과예측 방법으로 만들어 낸 것. • 정책델파이의 목적은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관련자로서의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표출시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이해관계나 가치판단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혜를 모으려는 일반적인 델파이의 목적과는 다르다.	
특징	① 선택적 익명성 : 초기에는 익명으로 의견 제시, 정책대안에 대한 주장들이 표면화된 후에는 참가자 간 공개토론 허용. ② 유도된 의견 대립(구성된 갈등) : 일부러 갈등을 조성하고, 그로부터 대안이나 대안 결과에 대한 창의가 나오길 기대함. 더 창의적인 idea 개발을 위해 각 전문가의 견해와 상호불일치한 산출을 개방. 주요 정책이슈의 잠정적 해결책에 대해 있을 수 있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창출. ③ 차이를 부각시키는(양극화된) 통계처리 : 개인의 판단을 집약할 때 불일치와 갈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수치 사용. ④ 양식 있는 많은 주창과 정책관련자의 의견 중시 : 참가자 선발시 전문성 자체보다는 흥미와 식견에 바탕을 두며, 참여범위가 전문가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정책관련자까지 포함하여 넓어짐. ⑤ 컴퓨터(인터넷)를 이용한 회의방식도 활용 • 전통적 델파이와 정책델파이의 구별	
	구 분	정책델파이(policy delphi)
	적용영역	정책문제에 대한 예측
	익명성	선택적 익명성(중간에 상호교차토론 허용)
	통계처리	의견차이나 갈등을 부각시키는 양극화된 통계처리
	합 의	구성[조성]된 갈등 - 극단적·대립적 견해의 유도와 존중
	응답자	정책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정책관련자 등 다양한 응답자 선정
	토 론	컴퓨터를 통한 회의방식, 대면토론도 활용
	유사점	주관적 예측기법, 다수의 응답자 선정, 반복과 통제된 환류, 의견의 통계 처리

답 ③

[관련기출]

1. 정책 델파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2 지방9급
- ① 일반적인 델파이와 달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 ②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이다.
 - ③ 대립되는 정책대안이나 결과가 표면화되더라도 모든 단계에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④ 정책문제의 성격이나 원인, 결과 등에 대해 전문성과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이 참여한다.
2.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정책델파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2 경찰간부
- ① 처음에는 익명성이 요구되나 정책안에 대한 논쟁이 표면화되고 나면 참여자들은 공공연한 입장에서 토론이 허용된다.
 - ② 흥미와 통찰력을 가지고 의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상황을 대표하는 주창자들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불일치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의견들보다는 의견의 중위값(medium)을 통계적으로 처리한다.
 - ④ 정책델파이는 의견이 합의에 이를 수도 있으나 보다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해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며, 주관적이고 질적인 예측방법으로서 컴퓨터에 의한 의견교류과정을 전개한다.

답 1. ③ 2. ③

19 통계적 가설검정의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1종 오류는 실제로는 모집단의 특성이 영가설과 같은 것인데 영가설을 기각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 ② 제2종 오류는 모집단의 특성이 영가설과 같지 않은데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 ③ 제1종 오류는 α 로 표시하고, 제2종 오류는 β 로 표시한다.
- ④ 확률 $1-\alpha$ 는 검정력을 나타내며, 확률 $1-\beta$ 는 신뢰수준을 나타낸다.

해설

④ (×) 확률 $1-\alpha$ 는 신뢰수준을 나타내며, 확률 $1-\beta$ 는 검정력을 나타낸다.

* 9급 시험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약한 내용이다. 국가직 7급에 이 내용이 출제된 것은 PSAT시험이 1차 시험에 들어가면서 통계학 기초지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출제된 듯 하다.

답 ④

통계적 가설검정의 오류

-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 추정된 원인과 추정된 결과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통계적인 의사결정의 타당성. 통계적 가설검정에서 연구자가 설정하는 가설(귀무가설, 대립가설) 범위에 따라 그에 맞춘 확률적인 오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통계적 추론의 논리 체계가 전개됨
- 통계적 가설검정의 오류

구 분	제1종 오류(type I error)(α error)	제2종 오류(type II error)(β error)
오류의 의미	실제로는 모집단의 특성이 영가설과 같은 것(영가설 참)인데 그 가설을 기각 \Rightarrow 참인 영가설(귀무가설) 기각 때로는 생산자 위험(producer's risk)으로도 불림(생산자 입장에서, 결함 없는 제품을 불량품으로 판정하는 생산자 위험 오류)	모집단의 특성이 영가설과 같지 않는데(영가설 거짓)도 그 가설을 채택 \Rightarrow 거짓인 영가설(귀무가설) 채택 때로는 소비자 위험(consumer's risk)으로도 불림(소비자 입장에서, 결함 있는 제품을 정상품으로 판정하는 소비자 위험 오류)
오류의 크기 (오류 범할 확률)	제1종 오류 범할 확률 : '유의수준 α ' 또는 ' α 위험률' 내세운 가설이 옳은데도 틀린 것으로 치고 기각할 수 있는 확률	제2종 오류 범할 확률 : β 위험률 내세운 가설이 틀렸는데도 옳은 것으로 치고 채택할 수 있는 확률
신뢰의 크기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	제1종 오류 범하지 않을 확률 : $1-\alpha \Rightarrow$ 신뢰수준(Confidence Level) - 귀무가설이 참일 때 귀무가설을 채택할 확률	제2종 오류 범하지 않을 확률 : $1-\beta \Rightarrow$ 검정력(Power of Test) - 귀무가설이 거짓일 때 귀무가설을 채택하지 않을 확률

신뢰수준($1-\alpha$)과 검정력($1-\beta$)는 서로 반대 방향. 보통 연구자의 관심대상은 α (유의수준)이며, 이론적으로 β 값을 1로 올리지 않고서는 α 를 0이 되게 할 수는 없음. α 와 β 모두 줄이는 방법은 증거보강이며, 통계적 관점에서 표본크기 확대. 표본크기를 늘리면 표본분포의 분산이 감소하여, 좁은 모양이 되므로, 유의수준(α)이 일정해도, 채택역 크기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

판단	진실		결과
	Ho 참일 때	Ho 거짓일 때	
Ho 기각 안함	옳은 결정(확률 : $1-\alpha$, 신뢰수준)	제2종 오류(확률 : β)	
Ho 기각 함	제1종 오류(확률 : α , 유의수준)	옳은 결정(확률 : $1-\beta$, 검정력)	

크기가 서로 상반됨(하나가 커지면 다른 것은 작아짐)
 α 오류에 기준을 두고 기각·채택

정책분석의 오류

정책결정자에게 제안된 정책문제해결방안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정보의 산출.

- ① 제3종 오류(meta error, 메타오류, 근원적 오류) - 문제 정의의 오류
 - ㉠ 정책문제의 인지와 정의가 잘못되면 후속 과정인 목표설정이나 대안탐색, 대안 선택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음. 이처럼 정책문제가 잘못 인지되거나 정의된 경우를 제3종 오류라 함(문제구성 자체가 잘못된 경우, 공식적 문제가 실질적 문제 상황을 잘못 나타내는 경우, 잘못 선택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등). 예) 청년실업의 원인이 자발적 실업(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됨)임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실업으로 판단한 경우
 - ㉡ 수단주의적 기획관(가치중립적·기술적 접근)은 목표나 가치판단적 요소를 고려하지 못해 3종 오류의 가능성이 높음.
 - ㉢ 제3종 오류를 막으려면 가치판단적 요소를 고려하는 규범주의적 기획관이나 '정책문제의 구조화 기법' 필요.
- ②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 - 대안 선택의 오류(인과관계의 오류)
 - ㉠ 제1종 오류(α error) : 잘못된 대안(정책)을 선택하는 오류
 - ㉡ 제2종 오류(β error) : 올바른 대안(정책)을 선택하지 않는 오류

오류 유형	의 미	문제정의(목표설정)	대안 선택
제1종 오류 (α error)	정책대안이 실제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잘못 평가하여 잘못된 대안을 채택하는 오류	오류 없음	효과 없는 대안의 채택, 틀린 대립가설을 채택 옳은 귀무가설(歸無假說; 0(零)가설)을 기각
제2종 오류 (β error)	정책대안이 실제 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잘못 평가하여 올바른 대안을 채택하지 않는 오류		효과 있는 대안의 기각, 옳은 대립가설을 기각 틀린 귀무가설(歸無假說; 0(零)가설)을 채택
제3종 오류 (meta error)	문제 정의의 오류(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잘못된 목표설정 으로 이어짐)	오류 있음	문제인지의 오류로 인해 잘못된 목표가 설정되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한 대안이 선택됨.

[관련기출] 문제의 구조화과정에서 범하는 세 가지 오류에 관한 설명이다. 빈 칸에 적절한 것은?

2010 경정승진

문제의 정의나 구체화에서 공통적으로 범할 수 있는 오류를 (㉠) 오류라 한다. 이것은 문제의 구조화를 잘못해서 틀린 문제의 해결을 유도하는 오류이다. 맞는 귀무가설을 배제하는 것을 (㉡)라 하고, 틀린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것을 (㉢)라 한다면, 틀린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은 (㉠) 오류인 것이다.

- ① ㉠ 제1종 오류, ㉡ 제2종 오류, ㉢ 제3종 오류 ② ㉠ 제1종 오류, ㉡ 제3종 오류, ㉢ 제2종 오류
 ③ ㉠ 제3종 오류, ㉡ 제1종 오류, ㉢ 제2종 오류 ④ ㉠ 제3종 오류, ㉡ 제2종 오류, ㉢ 제1종 오류

답 ③

20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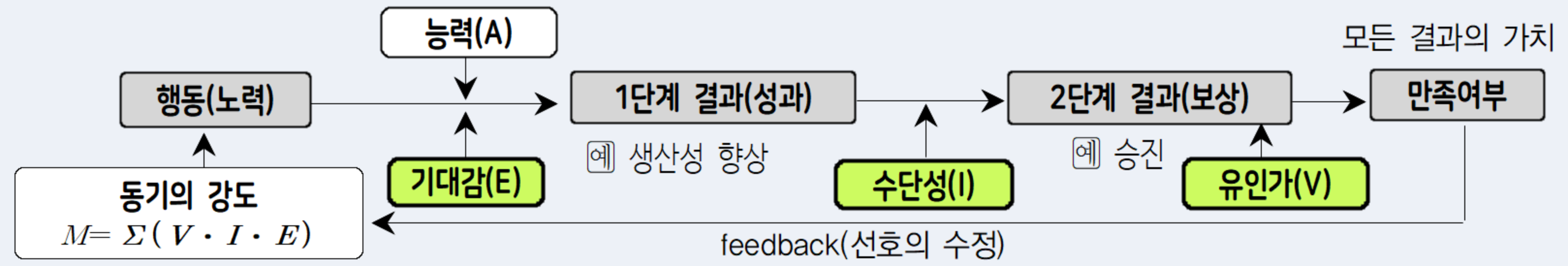
- ① 동기부여의 과정이론(process theory) 중 하나이다.
- ② 기대감(expectancy)은 개인의 노력(effort)이 공정한 보상(reward)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을 의미한다.
- ③ 수단성(instrumentality)은 개인의 성과(performance)와 보상(reward)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다.
- ④ 유인가(valence)는 개인이 특정 보상(reward)에 대해 갖는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해설

② (×) 기대감(expectancy)은 개인의 노력(effort)이 일정한 성과(Performance)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확률을 의미한다.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포터(L. Porter)와 롤러(E. Lalwer)의 성과(업적)·만족이론(Performance-Satisfaction Theory)에서 제시된다.

☒ 브룸(V. Vroom)의 선호·기대이론(Preference-Expectancy Theory; VIE 이론)

동기부여과정은 보상의 가치(유인가), 성과와 보상 간의 관계(수단성), 직무수행의 가능성(기대)에 좌우됨.



E	기대감 (Expectancy)	어떤 행위(effort)시 어떤 결과(성과)를 초래한다는 주관적(객관적×) 확률·믿음 $0 \leq E \leq 1$ 0: 기대감 전혀 없음, 1: 완벽한 확신	일 \rightarrow 생산성 증대
I	수단성 (Instrumentality)	1단계 결과(성과)가 2단계 결과(보상)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관적(객관적×) 확률치 $-1 \leq I \leq 1$ $I = -1$: 낮은 보상, $I = 1$: 높은 보상, $I = 0$: 보상과 무관	생산성 증대 \rightarrow 승진, 보수인상
V	유인가(誘因價) (유의성: Valence)	개인이 특정 결과(보상)에 대해 갖는 선호의 강도($-n \leq V \leq +n$) $V > 0$: 보상·승진·인정, $V < 0$: 과업과정상 압력과 벌, $V = 0$: 결과에 무관심	보수 인상, 승진에 대한 선호
결과	1단계 결과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결과 = 성과(outcome, performance)	생산성 증대
	2단계 결과	1단계 결과로 초래되는 결과 = 보상(reward)	승진, 보수인상
A	능력(ability)	어떤 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잠재력	행동의 잠재력

답 ②

[관련기출]

1.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2007 국회8급

- ①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근무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인 확률과 관련된 믿음을 기대감(expectancy)이라 한다.
- ② 브룸(V. Vroom)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력이외에도 직무수행의 능력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요인을 들고 있다.
- ③ 개인이 지각한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이 동기유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는다.
- ④ 개인이 지각하기에 어떤 특정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면 바람직한 보상이 주어지리라 믿는 정도를 수단성(instrumentality)이라 한다.
- ⑤ 어느 개인이 원하는 특정한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유의성(valence)이라고 하며, 유의성은 직무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하여 그 개인이 느끼는 보상의 매력도를 의미한다.

2. V. H. Vroom의 기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경찰간부

- ①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근무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인 확률과 관련된 믿음을 기대감(Expectancy)이라고 한다.
- ②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정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는 믿음을 공정성(Equity)이라고 한다.
- ③ 개인이 지각하기에 어떤 특정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면 바람직한 보상이 주어지리라 믿는 정도를 수단성(Instrumentality)이라 한다.
- ④ 어느 개인이 원하는 특정한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유의성(Valence)이라고 한다.

3. 기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2001 서울9급(수정) / 2012 지방9급 보건행정학

- ① 어떤 방법으로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 과정이론이다.
- ② 기대감(expectancy)은 특정 행위를 통해 달성될 성과의 객관적 확률이다.
- ③ 유의성(valence)은 특정한 보상에 대한 한 개인의 선호도이다.
- ④ 수단성(instrumentality)은 개인 활동의 성과와 그에 따른 보상의 관계를 나타낸다.
- ⑤ 동기의 강도는 유인가와 수단 및 기대간의 함수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4.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 소방간부후보

- ① 허즈버그(Herzberg)는 작업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만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② 매슬로우(Maslow)는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로 욕구의 퇴행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 ③ 맥그리거(McGregor)의 Y이론형 인간 및 아지리스(Argyris)의 성숙모형의 인간은 허즈버그(Herzberg)의 위생요인에 의해 동기부여 받을 가능성이 높다.
-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는 노력이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expectancy), 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instrumentality), 보상에 대한 주관적 선호(valence)의 세 가지 요인이 동기 부여 정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 ⑤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에서는 보상의 절대적 크기가 클수록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느낀다고 주장한다.

5.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 경찰승진

- ① 동기부여이론 중 과정이론에 해당된다.
- ② 기대이론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은 유의성(Valence), 수단성(Instrumentality), 기대감(Expectancy)이다.
- ③ '수단성'은 자신의 직무성과와 보상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 ④ '유의성'은 개인의 행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이다.

6. V. Vroom의 기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3 국가9급

- ① 개인의 동기는 수단성(instrumentality), 기대감(expectancy), 유의성(valence)에 의해 결정된다.
- ② 동기유발에 대한 과정이론이다.
- ③ 유의성이란 어느 개인이 원하는 특정한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이다.
- ④ 직원의 근무성과는 그 직원의 능력 이외에도 특성(trait), 역할인지(role perceptions)의 수준의 영향도 받는다.

7.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 국회8급

- ① 매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론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중 욕구, 자기실현 욕구의 5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하위계층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계층의 욕구가 나타난다.
- ② 허즈버그(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에 따르면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해서 모두 동기부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욕구는 충족되어도 단순히 불만을 예방하는 효과밖에 없다. 이러한 불만 예방효과만 가져오는 요인을 위생요인이라고 설명한다.
- ③ 애덤스(Adams)의 형평성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 비교대상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보다 크거나 작다고 지각하면 불형평성을 느끼게 되고, 이에 따른 심리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형평성 추구의 행동을 작동시키는 동기가 유발된다고 본다.
- ④ 엘더퍼(Alderfer)는 매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론을 받아들여 한 계층의 욕구가 만족되어야 다음 계층의 욕구를 중요시한다고 보고, 이에 더하여 한 계층의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바로 하위 욕구의 중요성이 훨씬 커진다고 주장한다.
- ⑤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의하면 동기의 정도는 노력을 통해 얻게 될 중요한 산출물인 목표달성, 보상, 만족에 대한 주관적 믿음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특히 성과와 보상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인 기대치의 정도가 동기부여의 주요한 요인이다.

8.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른 경우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2017 지방9급(상)

- ① 내가 노력하면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치(expectancy)가 충족되어야 한다.
- ② 내가 높은 등급의 실적평가를 받으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수단치(instrumentality)가 충족되어야 한다.
- ③ 내가 받을 보상은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유인가(valence)가 충족되어야 한다.
- ④ 내가 투입한 노력과 그로 인하여 받은 보상의 비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평해야 한다는 균형성(balance)이 충족되어야 한다.

답 1. ③ 2. ② 3. ② 4. ④ 5. ④ 6. ④ 7. ⑤ 8. ④

21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2010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가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 ② 성인지예산제도의 목적은 여성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 ③ 1984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 ④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금사업을 제외한다.

해설

- ① (○), ④ (×)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는 2010 회계연도 예·결산부터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2011 회계연도 기금부터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서와 성인지 기금결산서 작성. 국가재정법에 규정을 두어 세계 최초로 국가재정 기본법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명시. 지방정부는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에 의해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 시행.
- ②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
 - 성 중립적(gender neutral) 관점이 아닌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및 성 인지적 관점에서 대두
 - 최근 재정부운영방식의 패러다임은 종전 몰성인지(gender blind) 관점에서 성인지적(gender perceptive) 관점으로 전환. 기존 예산편성 과정은 여성과 남성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예산의 수혜가 남녀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면 동등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성중립적 관점이었지만, 정말 성 불평등 효과가 없는 지는 검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성인지예산 개념의 등장 배경임. 성인지예산은 성 주류적 관점에서 제시된 것으로 예산이 성 중립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양성평등일 수는 없다고 보며 세입세출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다고 전제하고 예산과정에서 남녀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예산.
 - ┌ 성 중립적 관점 : 남녀 간 획일적 평등을 강조하는 소극적인 기회의 공평
 - └ 성 인지적 관점 : 남녀 간 적극적인 공평을 구현하려는 결과의 공평
 - 성 주류화(性 主流化) :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 정책개발, 연구, 주창(advocacy), 소통과 대화, 입법, 자원배분, 계획, 프로그램 시행 및 모니터링에 있어서 양성평등적 시각과 인식이 중심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 공공자금을 사용하는 모든 공공부문 주체가 예산 및 비예산 활동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무차별, 동등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들 활동의 영향과 결과를 분석, 점검(모니터링), 환류하는데 중점
- ③ (×) 호주에서 1984년 최초 도입.

답 ①

[관련기출]

1.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 경찰승진

- ① 1984년 호주 정부가 처음 채택하였다.
- ② 성 중립적(gender neutral) 또는 몰성적(gender blind)인 제도이다.
- ③ 국가재정법 제26조에 의하면,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뿐 아니라 기금에도 적용된다.

2. 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행정사

- ① 2010회계연도부터 우리나라 정부예산에 실제 시행되었다.
- ② 예산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집행을 추구한다.
- ③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의 결과(성인지예산서 작성)와 과정(예산의 성별 영향 분석과정)을 동시에 추구한다.
- ⑤ 예산과정에 대한 성 주류화의 적용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배분의 변화를 추구한다.

3.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국가9급

-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성한다.
- ③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p>4. 성인예산(gender budget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p> <p>① 예산과정에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적용을 의미한다. ② 성 중립적(gender neutral) 관점에서 출발한다. ③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④ 성인지적 관점의 예산 운영은 새로운 재정 운영의 규범이 되고 있다.</p>	2012 지방9급
<p>5. 성인예산제도(남녀평등예산)의 기본전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p> <p>① 세출뿐 아니라 세입에 관해서도 차별 철폐를 추구한다. ② 세입·세출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르지 않다는 전제의 제도이다. ③ 호주에서 1984년 처음 시작되어 OECD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④ 예산정책의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다.</p>	2008 경기9급
<p>6. 우리나라 성인지(性認知)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p> <p>㉠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히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정부는 예산과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국회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예산안이나 결산서와는 독립적인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p>	2016 교육행정9급
<p>① ㉠, ㉡ ② ㉠, ㉢, ㉣ ③ ㉡, ㉢, ㉣ ④ ㉠, ㉢, ㉣, ㉣</p>	답 1. ② 2. ② 3. ② 4. ② 5. ② 6. ②

22 오츠(Oates)의 분권화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p>㉠ 중앙정부의 공공재 공급 비용이 지방정부의 공공재공급 비용보다 더 적게 든다. ㉡ 공공재의 지역 간 외부효과가 없다. ㉢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파레토 효율적 수준으로 공공재를 공급한다.</p>
<p>① ㉠ ② ㉢ ③ ㉠, ㉡ ④ ㉡, ㉢</p>

해설

㉠ (×)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공공재 생산비용은 같다고 전제한다(한계비용 일정, 규모의 경제 없음)
 ㉡ (○) 오츠의 분권화 정리는 특정 공공재의 소비가 지리적으로 전체인구 중의 일부 주민에만 한정되고(외부효과 없음) 각 구역(jurisdictions)에서 소비될 공공재의 공급비용이 중앙정부와 해당 지방정부에서 동일(공공재 생산의 한계비용 일정, 규모의 경제 없음)하다면, 중앙정부가 모든 구역에 걸쳐서 획일적으로 정해진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보다 지방정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해당 지역에서 파레토 효율적인 수준의 산출물을 공급하는 것이 언제나 더 효율적(파레토 효율, 자원배분의 효율성)이거나 최소한 중앙정부만큼 효율적이라는 이론

답 ④

<p>[관련기출] 오츠(Oates)의 분권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p> <p>㉠ 오츠의 이론을 따를 경우 지방정부의 규모는 작을수록 효율적이다. ㉡ 오츠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오츠의 이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과 맥을 같이 한다. ㉣ 오츠의 이론에 따르면, 특정 공공재 소비의 수혜 범위가 지리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외부효과가 발생한다면 상위 정부의 공급이 바람직할 수 있다.</p>	2021 서울7급 지방자치론
<p>① ㉠, ㉡ ② ㉢, ㉣ ③ ㉠, ㉢, ㉣ ④ ㉠, ㉢, ㉣, ㉣</p>	

해설

㉠ (×) 지방정부의 규모는 작을수록 효율적이라고 봄 -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지방공공재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임.
 ㉡ (○) 경제학적 견지(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의 일치, 자원배분의 효율성, 파레토최적, 사회후생 극대화)에서 지방분권의 이점을 설명.
 ㉢ (○) 특정 공공재의 소비가 지리적으로 전체인구 중의 일부 주민에만 한정되고 각 구역(jurisdictions)에서 소비될 공공재의 공급비용이 중앙정부와 해당 지방정부에서 동일하다면, 중앙정부가 모든 구역에 걸쳐서 획일적으로 정해진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보다 지방정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해당 지역에서 파레토 효율적인 수준의 산출물을 공급하는 것이 언제나 더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중앙정부만큼 효율적이라는 이론. 따라서 지방정부에 대한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칙(상급정부는 하급정부가 공급하기 곤란한 사무를 담당)과 맥을 같이 함.
 ㉣ (○) 오츠는 특정 공공재 소비의 수혜 범위가 지리적으로 한정되어 외부효과가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비용일 동일하다면,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 의한 지방공공재 공급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역으로 보면 특정 공공재 소비의 수혜 범위가 지리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외부효과가 발생한다면 상위 정부의 공급이 더 바람직(더 효율적)할 수 있다.

답 ④

✦ 오츠(W. Oates)의 분권화 정리(Oates's Decentralization Theorem)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공공재의 소비가 지리적으로 전체인구 중의 일부 주민에만 한정되고 각 구역(jurisdictions)에서 소비될 공공재의 공급비용이 중앙정부와 해당 지방정부에서 동일하다면, 중앙정부가 모든 구역에 걸쳐서 획일적으로 정해진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보다 지방정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해당 지역에서 파레토 효율적인 수준의 산출물을 공급하는 것이 언제나 더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중앙정부만큼 효율적이라는 이론. 경제학적 견지에서 지방분권의 이점을 설명. 지방정부에 대한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칙과 맥을 같이 함. 																					
전제 조건	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공공재 생산비용은 일정(규모의 경제 없음) ② 공공재의 지역 간 외부효과 없음 ③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과 수요에 대한 정보(주민의 선호)를 가짐. 중앙정부는 이러한 정보가 없음(정보의 비대칭성)																					
내용	① 중앙정부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므로 공공재를 획일적으로 공급하므로 지방의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welfare loss)가 발생함. ②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대한 정보(주민의 선호)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공공재를 공급함에 있어서는 과잉·과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임. - 지방정부의 규모는 작을수록 효율적임. ∴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 - 만약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선호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마다 서로 다른 양의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 중앙정부가 생산하여 지방정부로 배분하는데 따른 추가비용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재 공급의 한계비용 일정 ($MRT = D$) ΣMRS^A: A 지역 한계편익 ΣMRS^B: B 지역 한계편익 ΣMRS^C: 두 지역 한계편익의 평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공급주체</th> <th colspan="2">지방정부가 공급시</th> <th rowspan="2">중앙정부가 공급시</th> </tr> <tr> <th>A 지역</th> <th>B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효율성</td> <td></td> <td></td> <td></td> </tr> <tr> <td>공급수준</td> <td>$MRT = \Sigma MRS_A$ Q_A 수준 공급</td> <td>$MRT = \Sigma MRS_B$ Q_B 수준 공급</td> <td>$MRT = \Sigma MRS_C$ 두 지역 모두 Q_C 수준 공급</td> </tr> <tr> <td rowspan="2">배분적 효율성 (pareto 효율)</td> <td colspan="2">지역 주민의 선호를 반영한 각 지역별 최적 수준 공급</td> <td>A지역 Q_A 보다 과다공급: α 후생손실 B지역 Q_B 보다 과소공급: β 후생손실</td> </tr> <tr> <td colspan="2">효율적 배분</td> <td>비효율적 배분</td> </tr> </tbody> </table>		공급주체	지방정부가 공급시		중앙정부가 공급시	A 지역	B 지역	효율성				공급수준	$MRT = \Sigma MRS_A$ Q_A 수준 공급	$MRT = \Sigma MRS_B$ Q_B 수준 공급	$MRT = \Sigma MRS_C$ 두 지역 모두 Q_C 수준 공급	배분적 효율성 (pareto 효율)	지역 주민의 선호를 반영한 각 지역별 최적 수준 공급		A지역 Q_A 보다 과다공급: α 후생손실 B지역 Q_B 보다 과소공급: β 후생손실	효율적 배분		비효율적 배분
공급주체	지방정부가 공급시		중앙정부가 공급시																			
	A 지역	B 지역																				
효율성																						
공급수준	$MRT = \Sigma MRS_A$ Q_A 수준 공급	$MRT = \Sigma MRS_B$ Q_B 수준 공급	$MRT = \Sigma MRS_C$ 두 지역 모두 Q_C 수준 공급																			
배분적 효율성 (pareto 효율)	지역 주민의 선호를 반영한 각 지역별 최적 수준 공급		A지역 Q_A 보다 과다공급: α 후생손실 B지역 Q_B 보다 과소공급: β 후생손실																			
	효율적 배분		비효율적 배분																			
한계	① 한계비용 동일성 전제의 한계: 실제로는 공급비용의 차이가 존재함.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중앙정부가 생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 ② 고정비용을 고려 안 함: 수많은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고정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③ 외부효과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함.																					

23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용은 입법과목 사이의 상호 융통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으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나 위임 없이도 할 수 있다.
- 기관(機關) 간 이용도 가능하다.
- 세출예산의 항(項) 간 전용은 국회 의결 없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
- 이용과 전용은 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없다.

해설

① (x) 원칙: 입법과목인 장·관·항 간 상호 이용 불가

예외: 중앙관서의 장은 미리 국회 의결을 얻은 경우 ㉠ 기재부장관 승인 얻어 이용 or ㉡ 기재부장관이 위임한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이용 가능

•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 재해대책 자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 예산의 이용과 전용

구분	이용(移用)	전용(轉用)
국가재정법	입법과목(장·관·항 또는 분야·부문·정책사업) 간 상호용통 ↳ 국회의결 필요	행정과목(세항·목 또는 단위사업·편성비목) 간 상호용통 ↳ 국회의결 불필요
지방재정법	정책사업 간 상호용통 ↳ 지방의회 의결 필요	단위사업 또는 목 간 상호용통 ↳ 지방의회 의결 불필요

- ② (x) 비용의 목적·용도의 변경이므로 다른 사업의 비용으로 이용시 관할 기관이 다르면 기관 간 이용도 가능
 ③ (x) 전용은 행정과목인 세항·목 간 용통. 중앙관서의 장은 기재부장관 승인 언어 전용 가능 or 기재부장관이 위임한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전용 가능

•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④ (x) 이용·전용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질적 한정성 원칙(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이다.

▣ 이용·전용·이체의 구별

구분	이용	전용	이체
내용	입법과목(기관·장·관·항)간 상호용통(사업 내용·규모의 변경)	행정과목(세항·목) 간 상호용통 (동일 사업에 관한 지출 대상의 변경)	정부조직 관련 법령 제정·개정·폐지로 직무·권한 변동시 예산도 변동
	사용 목적의 변경 ↳ 질적 한정성(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		사용 주체(소속)의 변경
국회 사전의결	필요(원칙)	필요 없음	필요 없음
주체	중앙관서의 장(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하거나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한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가능)		기획재정부 장관
내역 제출	중앙관서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용·전용·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		

답 ②

[관련기출]

1.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한 설명이다. ㉠과 ㉡에 해당하는 것은?

2016 지방7급

이용은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 중 (㉠) 간 울타리를 뛰어 넘어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전용은 (㉡) 간 울타리를 뛰어 넘어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
①	장	관, 항, 세항, 목
②	장, 관	항, 세항, 목
③	장, 관, 항	세항, 목
④	장, 관, 항, 세항	목

2.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의 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9 서울7급(1)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반기 별로 그 전용내역을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관, 항, 세항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3. 다음 중 예산의 전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2005 경기9급(2)

- ① 한정성 원칙의 예외적 장치이다.
- ② 장·관·항 간의 용통을 의미한다.
- ③ 예산의 전용은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④ 입법과목 간의 용통을 의미한다.

4.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7 서울9급

- ①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관련 예산을 이동하는 것이다.
- ② 전용이란 입법 과목 간 상호 용통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③ 이월이란 당해 연도 예산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④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지출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이다.

5. 예산집행의 신속성 유지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소방간부

- ① 예산의 전용은 입법과목인 장·관·항 사이의 상호 융통으로 반드시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계상한 것이다.
- ③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
- 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이후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편성하는 것이다.

답 1. ③ 2. ③ 3. ① 4. ② 5. ①

24. 옴부즈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민의 요구가 없다면 직권으로 조사활동을 할 수 없다.
- ②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 ③ 사법부가 임명한다.
- ④ 시정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해설

- ① (x) 주로 국민의 신청에 의해 조사, 직권 조사도 가능.
- ② (○) 일반적으로 가용자원(인력·예산)이 많지 않아 활동범위가 제약되며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지 못함.
- ③ (x) 의회 소속 공무원, 의회에서 선출, 조사활동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단, 정부가 임명하거나, 행정부 소속인 국가(프랑스)도 있음.
- ④ (x) 직접적 통제권이 없어(시정조치의 강제권 없음) 시민의 불평·고충을 충분히 구제하기는 곤란함. 행정행위를 무효화·취소·변경할 수는 없으며, 시정·개선 등의 요구·권고만 가능하므로, 사실의 조사·인정이 주요 기능이고 직접적 통제권이 없음(이빨 없는 감시견 ; watchdog without teeth). 따라서 법적 성격보다는 사회적·정치적 성격이 강함.

☒ 옴부즈맨의 특징

- ㉠ **입법부 소속(외부통제)** : 옴부즈맨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의회에서 선출되고 조사활동에 대해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다만 행정부 소속인 국가(프랑스)도 있음.
- ㉡ **직무상 독립성** : 의회 소속이지만 직무수행상 독립성이 보장되며 업무에 대해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음.
- ㉢ **비당파성** : 당파성이나 정치성이 없는 중립적 조사관이며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음.
- ㉣ **직권조사 및 신청에 의한 조사** : 주로 국민의 신청에 의해 조사가 이뤄지지만 국민에 의한 민원제기가 없더라도 옴부즈맨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 ☑ 옴부즈맨은 소극적인 사후통제이다.(x)
- ㉤ **조사대상 - 위법성(합법성) 및 부당(합목적성)에 대한 통제** : 행정행위의 합법성(위법)뿐 아니라 합목적성(부당) 여부, 태만, 과실,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해서도 조사 가능(공직의 요구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가 대상).
- ㉥ **통제의 간접성** : 행정행위를 무효화·취소·변경할 수는 없으며, 시정·개선 등의 요구·권고만 가능하므로, 사실의 조사·인정이 주요 기능이고 직접적 통제권이 없음(이빨 없는 감시견 ; watchdog without teeth). 따라서 옴부즈맨 제도는 법적 성격보다는 사회적·정치적 성격이 강함. 옴부즈맨의 권한으로는 독립적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기소[형사재판 청구]와 탄핵발의[파면요청])이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조사권, 시찰권만 인정하고 소추권은 인정하지 않음(단, 스웨덴은 소추권 인정).
※ 직접적 감독권은 없지만 시정조치의 건의는 판단의 객관성·전문지식, 그들의 사회적 신망, 위신 등으로 인해 행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관계기관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의회에 대한 보고서, 신문 등을 통한 공표 등의 간접적 강제수단을 사용한다.
- ㉦ **신속한 처리와 저렴한 비용** : 행정심판이나 소송등 기존의 사법적 구제제도와 달리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융통성이 있는 제도.
- ㉧ **조정자·중재자 역할** : 개인적 신망과 영향력에 의존하는 바가 커서 엄격한 통제라기보다 조정자·중재자에 가까움.

답 ②

[관련기출]

1. 옴부즈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0 지방9급

- ① 옴부즈맨은 입법부 및 행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 ② 옴부즈맨은 행정행위의 합법성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 ③ 옴부즈맨은 보통 국민의 불편 제기에 의해 활동을 개시하지만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다.
- ④ 옴부즈맨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행위를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취소 또는 변경할 수는 있다.

2. 다음 중 옴부즈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회8급

- ① 1800년대 초반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 ② 옴부즈맨은 입법기관에서 임명하는 옴부즈맨이었으나 국회의 제청에 의해 행정수반이 임명하는 옴부즈맨도 등장하게 되었다.
-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옴부즈맨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체계 외의 독립통제기관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옴부즈맨의 일종이다.
- ⑤ 시정조치의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비행의 시정이 비행자의 재량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

3. 옴부즈맨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 소방간부후보

- ①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채택된 옴부즈맨은 입법부 소속으로, 직무수행 상 국회의 간섭과 통제를 받았다.
- ② 옴부즈맨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한정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옴부즈맨이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를 통제 대상으로 삼는다.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권조사권을 갖고 있어 고충민원 신청이 없어도 사전심사와 구제가 가능하다.

4. 옴부즈맨(Ombudsman)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행정사
- 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행정감찰관제도이다.
 - ②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결과를 알려주고 언론을 통해 공표하기도 한다.
 - ③ 옴부즈맨은 기능적으로 자율적이고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 ④ 독립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조사를 하여 시정을 촉구하거나 건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다.
 - ⑤ 옴부즈맨과 유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이 내린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조치, 권고, 취소를 결정한다.
5. 옴부즈맨(Ombudsman)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9 국회8급
- ① 1809년 덴마크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어 실시된 제도로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다.
 - ② 전형적인 내부 행정통제의 하나로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한다.
 - ③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취소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융통성과 신속성이 높은 제도로 기존의 경직된 관료제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활용되며 국가마다 동일한 형태를 지닌다.
 - ⑤ 국민의 고발에 의해 임무수행이 수동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직권에 의해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6. 옴부즈맨(Ombudsman)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1 국가7급
- ① 옴부즈맨의 개인적 신망과 영향력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 ②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게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 ③ 다른 통제기관들이 간과한 통제의 사각지대를 감시하는 데 유용하다.
 - ④ 옴부즈맨은 직권으로 조사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국민의 요구나 신청에 의해 활동을 개시하기도 한다.
7. 옴부즈맨(ombudsman)제도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지방7급
- ① 옴부즈맨은 비교적 임기가 짧고 임기보장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옴부즈맨에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은 행정 관료의 불법행위와 부당행위를 포함한다.
 - ③ 옴부즈맨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직접 취소·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 ④ 업무처리에 있어 절차상의 제약이 크지 않아 옴부즈맨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
8. 옴부즈맨(Ombudsman) 제도의 일반적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지방7급(1회)
- ① 행정결정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법원·행정기관에 대한 직접적 감독권을 갖고 있다.
 - ② 입법부에 속해 있지만 직무 수행시는 정치적 독립성을 지닌다.
 - ③ 국민으로부터 민원제기가 없어도 언론내용 등을 토대로 옴부즈맨 자신의 발의에 의해 조사할 수 있다.
 - ④ 옴부즈맨이 조사할 수 있는 행위는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공직의 요구에서 이탈된 모든 행위라고 할 수 있다.
9. 옴부즈맨제도(Ombudsma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2 서울9급
- ① 행정부가 입법부의 통제로부터 자율권을 갖기 위한 수단이다.
 - ② 정의롭지 못하거나 잘못된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설명을 요구한다.
 - ③ 옴부즈맨은 법적으로 확립되고, 기능적으로 자율적이다.
 - ④ 제도의 기본 성격은 청원이나 진정과 비슷하다.
 - ⑤ 독립적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10. 옴부즈맨(ombudsman)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행정사
- ① 문제해결을 위한 처리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 ②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③ 일반적으로 시민의 고발에 의하여 활동을 개시하지만 자기직권으로 조사활동을 하기도 한다.
 - ④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맨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⑤ 스웨덴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행정통제 수단이다.
11. 옴부즈맨 제도의 일반적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경정승진
- ① 합법성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에 문제가 있는 행정행위도 조사대상이 된다.
 - ② 주로 비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사는 대면적·직접적·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 ③ 신청·고발에 의해서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직권으로 조사활동을 하는 경우는 없다.
 - ④ 행정기관에 시정을 명령·강제하거나 정부부처의 결정을 무효·취소할 수 있는 직접적 권한이 없다.
12. 옴부즈맨(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2013 해경간부
- ① 옴부즈맨 제도는 융통성과 비공식성이 높은 제도이다.
 - ② 옴부즈맨 제도는 법적이라기보다 사회적·정치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 ③ 옴부즈맨 제도는 옴부즈맨의 개인적 신망과 영향력에 의존하는 바가 큰 제도이다.
 - ④ 옴부즈맨 제도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불평제기 이전에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13. 옴부즈맨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 경간부
- ①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어 실시된 제도이다.
 - ② 옴부즈맨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직접 취소·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 ③ 옴부즈맨은 시민의 요구나 신청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도 있다.
 - ④ 우리나라의 경우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옴부즈맨 기관에 해당한다.
14. 스웨덴의 옴부즈맨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군무원
- ① 행정에 대한 내부통제 수단이다.
 - ②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 ③ 권리구제에 있어서 법원의 재판절차와 달리 신속히 처리되며 비용이 저렴하다.
 - ④ 시민의 권리구제 신청이 없어도 직권조사 권한을 갖는다.

15. 옴부즈맨(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2016 지방9급

- ㉠ 옴부즈맨 제도는 설치주체에 따라 크게 의회 소속형과 행정기관 소속형으로 구분된다.
- ㉡ 옴부즈맨 제도는 정부 행정활동의 비약적인 증대에 따른 시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구제제도를 두기 위하여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 ㉢ 옴부즈맨은 행정행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 ㉣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맨에 해당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답 1. ④ 2. ④ 3. ⑤ 4. ⑤ 5. ⑤ 6. ④ 7. ① 8. ① 9. ① 10. ① 11. ③ 12. ④ 13. ④ 13. ① 15. ②

25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진은 빅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정형 데이터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 ③ 각종 센서 장비의 발달로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나타났다.
- ④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해설

㉠ 빅데이터의 특성(3V+1V)

- ㉠ 양·크기·규모(volume) : 대규모 데이터의 집합 및 관련 기술과 인력을 통칭. 기술적인 발전과 IT의 일상화가 진행되면서 해마다 디지털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
 - ㉡ 속도(velocity) : 데이터 생성속도 빠름. 사물정보(센서·모니터링), 스트리밍정보 등 실시간성 정보 증가. 실시간성으로 인한 데이터 생성·이동(유통) 속도 증가, 대규모 데이터 처리 및 가치있는 현재정보(실시간) 활용을 위해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속도가 중요(신속한 감지-대응 시스템)
 - ㉢ 다양성(variety) : 데이터 형식이 다양함.
 - ㉠ 정형화된 데이터 :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로 기존 솔루션으로 쉽게 보관·분석·처리 가능.
 - ㉡ 반정형화된 데이터 : 고정된 필드로 저장되어 있지 않지만, XML·HTML같이 메타데이터나 스키마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 메타정보·센서데이터·공정데이터 등 미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데이터,
 - ㉢ 비정형화된 데이터 :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유튜브에서 업로드하는 동영상 데이터, SNS나 블로그에서 저장하는 사진과 오디오 데이터, 메신저로 주고 받은 대화 내용, 스마트폰에서 기록되는 위치 정보, 유무선 전화기에서 발생하는 통화 내용 등
 - ㉣ 분석가치(value) : 분석 가치와 활용효과 측면으로 의미가 확대되는 추세임
- 기타 특징 : 복잡성(complexity), 현실성(reality), 시계열성(trend), 결합성(combination)

㉡ 빅데이터의 배경

- 디지털 생활의 보편화(스마트 혁명)와 데이터의 폭증-공간, 시간, 관계, 세상을 담는 데이터.
- ㉠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특히 스마트폰) 보급 확대, 개인화 서비스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확대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은 물류 이동 및 재고의 변화뿐 아니라 개별 소비자들의 개인정보·소비행태 같은 모든 일상에 대한 디지털 기록(life-log)을 가능하게 함.
 - ㉡ 데이터 생산 기술의 진보(센싱 기술,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기)와, 데이터 저장·관리·분석 기술의 발전.
 - ㉢ 데이터 마이닝에서 '빅 데이터 마이닝'으로 : 데이터의 자원이 축적과 공유를 통해 엄청난 규모로 쌓이면서 데이터의 역할은 '분석과 추론(전망)'의 방향으로 진화.

답 ①

[관련기출]

1.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7급(하)

- ① 과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 ② 빅데이터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보안, 암호화,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 ③ 우리나라는 현재 빅데이터 활성화를 목표로 한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다.
- ④ 반정형화된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활용하는 데이터의 수준이나 폭이 확대되고 있다.

2.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을 위하여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빅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국가7급

- ① 빅데이터 부상의 이유로 페이스북(Facebook)·트위터(Twitter)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보급 확대를 들 수 있다.
- ② 인터넷쇼핑업체인 아마존(Amazon)이 고객 행동 패턴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품 추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빅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이다.
- ③ 빅데이터는 비정형적 데이터가 아닌 정형적 데이터를 지칭한다.
- ④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제도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다.

3. 정보화와 전자정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가9급

- ① e-거버넌스는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의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과정과 구조의 실현을 추구한다.
- ②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빅데이터(big data)의 3대 특징은 크기, 정형성, 임시성이다.
- ④ 지역정보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의 효율성 강화이다.

답 1. ③ 2. ③ 3. ③